

제329회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9 호

국회 사무처

2014년11월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1
-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5

(10시17분 개의)

○부의장 이석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윤조 의원 대표발의로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10시18분)

○부의장 이석현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입동이 며칠 남았습시다만 국민들의 삶이 겨울로 들어선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쯤이면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스위치를 누르는 것마저 덜덜 떠는 것이 지금 서민의 삶입니다.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 모두 한 목소리로 민생경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46조 원의 재정확장을 하면 뭐합니까? 골목시장에는 기별도 없습니다.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시간제·초단기 계약직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한시가 급한 중환자들에게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입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한가운데 구들장이 내려앉은 상황인데 아무리 군불을 때봐야 아랫목만 절절 끓어 타들어갈지언정 윗목은 여전히 냉골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입니다. 그중에 3분의 1이 단기계약직입니다. 1900만 월급쟁이 중에 절반은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됩니다. 국민의 절반이 소비여력이 없는데 어느 기업이 투자를 마음 놓고 할 것이며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년간 기업들이 쌓아둔 사내유보금 760조 원, 29배나 증가했습니다. 월급쟁이 실질임금 상승률은 0%, 그나마 임시직은 마이너스입니다.

고통분담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누가 누구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절반의 국민들은 이미 더 이상 줄라떨 허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서민에게 ‘빚’ 부추겨서 부동산 경기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 대신 서민 증세하고 공공요금 올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리겠다고 합니다.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염치없는 일입니다. 제발 국민들 좀 살려 주십시오.

자유시장경제이론의 창시자 아담스미스는 “이기심만으로 가득찬 세상에서는 시장경제마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현실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주도 경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 답입니다.

수출은 주춤하고 빚에 의존한 소비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유일한 활로는 서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일입니다. 소비여력이 없는 국민의 절반을 방치하고서 내수도 투자도 경제활성화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600만 비정규직의 월급을 올리고 500만 자영업자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서민에게 빚 부추겨서 부동산 경기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의 정상들이 앞 다투어 최저임금 인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소득 주도 경제 하겠다더니 왜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말만 해 놓고 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입니까? 지도에 없는 길 가겠다더니 설마 길을 찾지 못한 것은 아니겠지요?

소득 주도로 가는 길을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시급하고 기초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십시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인데 너무 급진적인 제안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가 시간당 7920원입니다.

시중노임단가의 개념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이 이 수준은 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중노임단가 인상 추세로 보면 17년까지 1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봅니다. 부담

이 될 수 있는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100% 정규직화 하십시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중에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9%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남은 3년 동안 매년 12만 명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5만 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임금동결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제안하신 만큼 국회의원과 3급 이상 공무원까지 임금동결을 확대해서 그 동결분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25살 젊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총명함과 근면함을 두루 인정받던 이 젊은 여성은 2년 동안 3개월, 6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일곱 번씩이나 쪼개기 계약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정규직이 되기 위해 성추행까지 참아가며 매일매일 느꼈을 모멸감과 낭패감을 생각하면 또래의 아이를 둔 엄마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기간제법 입법 취지가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쪼개기 계약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미래와 꿈을 쪼개는 흉기로 둔갑돼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몹시 화가 납니다.

기간제법이 더 이상 쪼개기 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는 실태 조사와 제도 정비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얼마 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수상이었던 간 나오토 일본 전 총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추호의 의심 없이 원전안 전 신화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원전소장이 원전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몹시 놀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탈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 호소카와 전 총리 또한 탈원전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23기로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입니다.

향후 원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리·월성 원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원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동해안에 건설되고 있는 수십 기의 원전은 우리나라 및 동북아 안전에 직결돼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현 세대에게는 원전의 안전한 이용을,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는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은 대통령과 우리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원전 유치를 반대한 삼척시 주민 투표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낡은 원전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폐쇄해야 합니다.

원전을 대체할 재생 가능한 에너지사업을 서둘러 주십시오.

국회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에 재정안정화의 잣대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빠른 고령화와 수명연장시대에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하위 공무원들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권리는 가능한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은 노후 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기업들의 부실 원인이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3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부가 유출된 자원외교와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린 4대강 사업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재앙으로 커가고 있

습니다.

이러한 공기업 부실의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야말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공기업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부유출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경제법안 30개 가운데 크라우딩 펀딩 도입이나 월세를 세액공제로 하는 좋은 법안은 보완과정을 거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통법처럼 서민 울리는 반민생법안, 대기업 소원수리용 법안들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학교 옆에 관광호텔을 짓는 법을 어느 부모가 찬성하겠습니까? 의료비 상승과 의료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은 대형병원을 위한 법이지 국민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분양가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법, 카지노와 같은 사행산업을 육성하는 법들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가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으면서 무엇에 앞서 아이들 교육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다른 것 다 쓰고 돈 없다는 핑계로 교육재정을 부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가 되어 주십시오.

야당이 제안한 무상급식, 여당이 제안한 누리과정, 소중한 두 가지 교육복지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원을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내년 말까지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결정에 따라 62곳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입니다만 연쇄효과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면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결정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하실 것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한 저도 현재의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했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개편을 명한 지금이

야말로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어 소중한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정치는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선거제도 개혁에 발 벗고 나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새롭게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정치개혁은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의 철폐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비단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소모적인 대결정치, 기득권 편향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만나 본 의원님들은 대부분 여야를 떠나 의정활동 의욕이 넘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으로 묶이고 양당이 마주서면 작은 견해 차이도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치닫게 됩니다. 국회가 공전되고 대립이 격화되는 만큼 사회계층별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현실이 양당이 주도해 온 정치의 결과라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을 구조적으로 제약해 왔습니다. 이 제도하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고 참신한 제3세력이어도 제1당, 제2당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아무리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은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안과 성과에 주력하기보다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만드는 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 경쟁으로 정치개혁을 대신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의원 교체율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당체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격렬하기만 할 뿐 아무런 희망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불모의 정치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민주화 이후 20년간 우리 정치를 독과점해 온 양당의 경쟁구조를 허물고 정치에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현재 판결 취지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유

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단순다수대표제야말로 인구편차 못지않게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파동, 인위적인 합당은 또 다른 정치 불신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가치, 다른 정치가 존중되지 못한 채 정치 양극화의 압박 아래 야권연대니 보수단일화에 함몰되는 한 우리 정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굴절되지 않으면서도 안정된 득표를 얻는 결선투표제는 민주정치 발전과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유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진세력, 소수세력도 역시 연정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만큼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저희 정의당은 현행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즉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의 제안을 포함해 이미 제안돼 있는 도농복합 선거구, 중대 선거구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서로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전투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산하에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 정당 대표연설에서 김무성 대표께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입법화를 제안하셨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개별정당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 입법화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공천 갈등의 심각성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은 당의 리더십과 내부 규범에 의해 풀어 가야 할 문제입니다.

공직후보 선출방법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각 정당이 가진 문화와 규범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적 발상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초공천제 폐지 논란을 재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공천 갈등 완화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동안 하향식 공천이 의원 줄 세우기와 계파정치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상향식 공천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정당 창당 때부터 공직후보자를 당원 직선 방식으로 선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천은 정당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후보를 공천해야 비로소 정당다운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천과 관련된 당내 갈등 때문에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미루는 것은 책임정치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적 기반이 아니라 동원력을 갖춘 돈 있고 명망 있는 유지, 명사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점도 새겨 봐야 합니다.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 이상 이런 정치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내각책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연정형 권력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연합정치의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유력 정치세력 간의 권력 나눠 먹기로 개헌이 다뤄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헌은 한반도 통일 국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다원화된 국민의 정치적 이해를 끌고루 대변할 수 있는 정당체제를 도입하고, 조정과 타협의 연합정치를 제도화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을 강화하는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개헌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헌법은 정치경쟁의 원칙과 규범을 정하고 시민의 삶을 틀 짓는 최고법입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는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 약속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또 각 당은 개헌안과 프로세스에 대한 당론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을 공론화하기 위해 당적으로 정돈된 결연함을 갖추는 것은 시민과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개별 의원, 개별 정치 지도자 차원에서 중구난방으로 제기되는 개헌론은 권력 교체기마다 등장하는 '개헌팔이' 정치로 취급되어 국민과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비정상적인 정치의 정상화는 우리 국회의원들

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정치의 가치가 인정받고 정치인으로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정치개혁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0시41분)

○부의장 이석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 서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서갑 박병석 의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 사회석에 있으면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오늘 마침내 저도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의 역사는 소용돌이쳤고 불행한 역사를 맞았습니다. 청일전쟁이 그러했고 러일전쟁이 그러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1년간은 우리가 남북관계의 지평을 넓히고 그리고 외교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황금기였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미·일·중·러 4대국의 리더십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들어섰고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기를 맞았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들어섰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다시 들어섰고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때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했다면 국제 안보환경은 훨씬 유리한 지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또다시 미·일 등 해양세력과 중·러 등 대륙세력의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중국의 신형대국 관계, 빅2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삼각과도가 밀려오고 있고 대한민국 한반도는 그 삼각과도에 올라앉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7년간 남북관계는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왔습니다. 만일 더 이상 남북관계의 고착화가 심화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미·일 등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완전 무산된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완전 무산은 아니고 지금 북한의 태도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대변인은 왜 무산됐다고 발표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완전히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원 참으로 현명치 못한 태도입니다. 설사 남북 간에 갈등을 빚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이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북에서는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남북 대화를 일방적으로 또는 위협적인 주장을 하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에서 발표였고, 앞으로 우리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대화는 재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북한의 빠라 전단 때문에 남북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웅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 화해무드에 역행하는 겁니다.

지금 통일부장관이 들고 있는 표현의 자유 21조4항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4조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단의 살포로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대 국민들이 겪는 생명과 생존의 위험이 대북전단 빠라만 못하다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가 대북전단을 법으로 통제할 그런 근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헌법 37조가 모든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경지대의 국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모처럼 찾아온, 7년 만에 찾아온 남북 화해 분위기를 위하여 대북전단은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북에서 우리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만 다만 우리 남쪽에서도 국민의 안전이나 갈등이 문제가 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써 그것을 막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최소한 남북 대화의 국면이 이 시간만이라도, 이 시기만이라도 대북전단은 정부가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7년 만에 돌아온 남북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를 막을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됐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향적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북 교류와 협력이 없는 대북 정책은 허구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3개 정부의 대북 교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3개 정부의 우선 경제 교류면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연간 11억 달러, 이명박 정부가 18억 달러였고 박근혜정부는 13억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 교류는 노무현 정부 연간 7만 8000, 이명박 정부 13만 4000, 박근혜정부 8만 6000명이었고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 3700여억 원, 이명박 정부 500여억 원, 박근혜정부 14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인적·물적 교류가 급속히 줄었지요?

지금 북한의 대중 경제예속이 너무 심각합니다. KOTRA에 따르면 2007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북한의 대중 경제교역 의존도는 67%였습니다. 작년에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무려 89%입니다.

교역뿐만이 아닙니다. SOC 투자, 지하자원 개발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대화록을 보면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 북한을 동북 4성화처럼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조차도 북한 경제가 빠르게 중국에 예속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계속해 왔습니다. 과연 시간은 반드시 우리 편이었는가 하는 것을 자성해 볼 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큰 빅딜을 해야 합니다. 통 큰 협상을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5·24 조치의 전면 해제, 금강산관광의 재개 그리고 북한은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전면적이고 일상적인 재회를 허용하는 빅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래에 와서 인적 교류는 전하고 같습니다마는 대북지원이 다소 줄어든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실험을 하고 최근의 개성공단 사태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인적 교류와 대북 지원을 더욱 늘려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5·24 조치 해제의 문제는 앞으로 남북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에 5·24 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5·24 조치를 놔두고는 남북관계가 근본적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24 조치 이후에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지 않았다면 우리의 대북제재가 옳았지요.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켰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 것입니다.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더 이상 7년간의 루즈 루즈 게임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찾아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찬성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도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

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이 되면 얼마만한 비용이 들어가고 통일이 되면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하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관한 정부의 공식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부의 공식 통계는 갖고 있지 못하고 각 연구단체에서 제시한 통일비용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얼마가 든다고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 이면서도 통일이 되면 얼마만한 비용이 들고 얼마만한 편익이 올 것인지 정부는 공식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물어보면 통일비용은 55~277조가 든다, 그러나 통일편익에 관한 통계는 없다고 말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 통일대박론을 얘기하는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편익조차 없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범정부적으로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편익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인리가 있습니다만 통일비용이나 통일 후에 우리가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워낙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워낙 편차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장관한테 물어보면 통일비용에 관해서는 수치를 얘기하는데 통일효과에 대해서는 수치를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반드시 빨리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것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작권 연기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동두천과 용산 연합사 이전의 연기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먼저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양쪽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점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장관은 ‘한미 상호 공감대 속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든 언론들이 한국 측이 먼저 이전 연기를 요청했다고 확인된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저도 그것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총리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투명하게 공식적으로 진행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한국이 북한의 경제력에 GDP가 40배, 국방비를 연간 30배 이상 쓰면서 전작권을 세 번째 무기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전작권은 원래의 계획대로 2015년 12월에 이전하는 걸로 그동안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이 현재 그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에서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연기하자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한 치의 빈틈도 없는 튼튼한 안보, 굳건한 한미 동맹,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전작권을 연기함으로써 킬체인과 KAMD에 들어가는 돈만 17조,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중대한 사정 변경을 가져왔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시고 국민을 납득시키셔야 할 것입니다. 경제력이 40배, 국방비가 30배인데 또 다시 작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않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는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서 새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국방계획에 우리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17조 원의 비용이 드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하기로 돼 있던 비용이라는 점을 말

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산에서 방위비 증가율이 평균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8%, 10% 그런 정도로……

○**박병석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정부의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8.8%, 이명박 정부 5.3%, 박근혜정부 3.5%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사드 체계, 한국 배치를 검토하거나 서로 얘기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부는 그런 계획이 없고 또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드 배치는 단순한 방어체계를 넘어서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뒤흔들 수 있는 소용돌이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공식, 비공식 상의를 했습니다. 국익의 견지에서 신중하게 주권 국가로서의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박병석 의원** 총리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면서도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고 통일 효과가 얼마인지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통일 대박론을 외치면서도 통일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통일 편익에 대한 공식자료도 갖추고 있지 않은 정부.

그리고 남북 개선의 마지막 골든타임에 전단 문제로 7년 만에 찾아온 남북 해빙의 무드를 건너차 버린 남북한.

동북아 정세 전반에 소용돌이를 몰고 올 한미 전시작전권 무기한 연기.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평화의 한반도, 통일의 한반도, 이것은 단순히 분단된 조국이니까 통일되어야 된다는 당위론적·관념적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몇년째 중진국의 문턱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 시장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이 결합한다면 남북한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선진국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남북 경제공동체는 8000만의 소비, 중국의 동북 3성과 시베리아를 합치면 2억의 경제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키는 남북 개선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초로 하되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분단의 고착화를 막아야 합니다. 지난 7년간 담보하거나 쇠퇴했던 남북 분단의 고착화가 더 이상 계속된다면 우리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행한 역사를 또다시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일의 해양세력, 중·러의 대륙세력이 또다시 한반도에 갈등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격랑의 삼각과도 위의 한 정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기 국익에 따라서 언제나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현대사는 누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할 때 국제적 협력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 화해무드를 더 이상 건어차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남이든 북이든 모두가 나도 양보할 수 있다는 통 큰 협상, 빅딜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남북이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또 다시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중 강국의 휘둘림을 당할지 모른다는 엄연한 경고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관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박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출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劉承旻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님과 외교·통일·국방장관님, 대구 동구출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국민의 생명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왜 사드 요격미사일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하느냐,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국방장관님 또 외교장관님 총리님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교장관님과 총리님께서 저와 국방장관과의 대화를 잘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해서 그 핵탄두를 탑재한 핵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과거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북한의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劉承旻 議員** 그런데 우리 사회 내부는 사드 도입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오랜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막고 최선의 국가전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드 문제에 관한 진실을 국민한테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劉承旻 議員** 사드를 반대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너무 낮은 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고도 40km부터 150km까지를 방어하는 사드는 아무 쓸모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반대주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북한과 중국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국내 일부 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또 진보언론·야당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의 일부 예비역들도 이런 주장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발간된 ‘짜드’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 쏘는 미사일은 고도가 높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패트리엇 같은 걸로 충분히 격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다가 독자적 방어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어요’ 이런 대사가 나와 가지고 이 소설을 읽은 많은 국민들께서 마치 이 대사가 사실인 양 착각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반대는 차치하고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첫째 반대 이유, 북한의 핵미사일이 높은 고도로 날아오지 않고 낮은 고도로 날아오고 있다, 이 반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어떤 고도로, 어떤 궤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우리에게 공격을 할지 여기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드를 반대하는 분이나 찬성하는 분이나 그냥 각자 주장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논쟁을 끝내고 사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북한 스스로 사드가 꼭 필요하다는 명백한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2014년 올해 2월부터 9월 사이에 북한이 동해안으로 발사한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미사일 11발의 궤적·최대고도·체공시간 이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이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는 올해 들어와서 북한이 발사한 수백 발의 미사일, 방사포, 정체 미상의 신형 전술무기 이런 걸 다 합친 그중에 스커드와 노동만 골라낸 겁니다.

저 표에서 보듯이 지난 3월 26일 날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안으로 발사된 노동미사일 2발은 650km를 날아가고 최대고도 150km까지 올라갔고 약 마하 8.0의 최대속도로 7분 30초 동안 비행을 했습니다.

저 표에서 노동미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일들 보시면 11발이 전부 스커드미사일인데 11발의 스커드미사일 중에 9발은 500km를 날아가고 최대고도 130km까지 하늘로 올라갔다가 약 6분 30초 동안 비행을 하고 최대속도 마하 5.0으로 날아갔습니다.

저기에 파란 띠, 제일 위에 있는 파란 띠를 보시면 2발의 스커드미사일은 고도를 20km 정도 더 올려 가지고 150k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은 비거리가 250, 사거리가 250km만 절반으로 날아갔습니다.

저 표가 북한이, 제가 만들어 낸 게 아니라 우리 군이 레이더를 이용해서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도발할 때 그 궤적을 다 추적한 실제 궤적입니다.

장관님, 북한이 이 미사일 13발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한 핵탄두 탑재하고 남쪽으로 90도 돌려 가지고 남한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은 숙천, 평안남도 숙천에서 발사한 노

동미사일의 사정권에 남한 전역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들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은 황해도 평산과 함경남도 원산에서 각각 쏜 스커드미사일도 남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남한 안에서 저 핵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올해 북한이 쏜 모든 노동미사일과 스커드미사일의 실제 궤적이 모두 고도가 150km 내지는 130km까지 올라갔고, 북한이 아주 교묘한 실험을 한 게 스커드미사일의 경우에는 사거리를 반으로 줄이고 고도는 더 높이는 걸 보여 줬습니다. 그 말은 노동미사일의 경우에도 남한의 어느 도시,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를 타격하기 위해서 사거리를 줄이려면 고도가 더 높이 올라가서 떨어질 수 있음을 저 표는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 표를 가지고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포물선 그림, 저것은 3월 26일 날 숙천에서 발사한 노동미사일의 실제 궤적입니다. 발사해서 쪽 올라가서 150km, 대기권이 100km라면 150km까지 올라가서 쪽 떨어져서 목표 상공에서 폭발하는 그런 노동미사일의 그림입니다.

장관님, 저 핵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에서 폭발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량살상 대참극이 일어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은 전쟁 초반에 싸울 의지조차 꺾이고 말 것입니다. 69년 전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 보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맨 그 참극이 어땠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히로시마보다는 위력이 약하고 나가사키의 팻맨 정도 되는 소위 1메가톤급의 핵폭탄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고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다가 터지면, 폭발하면 폭풍으로 인한 파괴가 반경 17km, 복사열로 인한 화상이 반경 15km,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 내지 중상이 반경 3km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강남역에, 대구 동성로, 부산 남포동에, 광주 금남로에, 이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그 대참극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라는 것은 남한이 먼저 핵으로 공격을 받아 가지고 잿더미가 되고 나면 미국이 보복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남한이 핵 공격을 받아서 잿더미가 되기 전에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군

의 최우선 목표가 되고 임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중요한 과업입니다.

○劉承旼 議員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議員 그러나 우리 군은 현재 핵미사일 방어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계열 중에 PAC-2라는 그 요격 미사일이야말로 핵미사일 방어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PAC-3를 도입하더라도……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포물선 그림입니다. 그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AC-3를 도입하더라도 저 그림의 15km 고도, A라고 된 그 점에서 수초간의 요격 기회가 단 한 번 있을 뿐이고 그나마 요격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PAC-3가 요격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PAC-3가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넓이는 우리 한반도 지도상의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PAC-3의 방어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劉承旼 議員 우리 ADD가 자체 개발 중인 M-SAM, L-SAM은 아직 개발의 성공 가능성도 지극히 불투명하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우리가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PAC-3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무기체계는 PAC-3보다는 더 나은 성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劉承旼 議員 그렇지만 그런 의지만 갖고 있지 아직 개발이 언제 될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실제 개발을 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議員 2020년대 중반까지 17조 원을 들여서 구축하겠다는 킬체인과 KAMD 여기에는 사드나 SM-3 같은 중고도 내지는 고고도 요격 미사일은 아예 없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무기체계는 탐지·교란·식별·파괴하는 그런 여

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劉承旼 議員 이래 가지고는, 이런 대비책을 가지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아까 포물선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이 사드를 도입한다면, 우리 군이 사드를 가진다면 저 그림의 40km 이상 150km 사이에 B라고 된 점, C라고 된 점, D라고 된 점, 저 지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사드의 요격 성공 확률은 80%가 넘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이 요격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원천적으로 포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의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 이것은 국민들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전략의 대실패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임(DIME)요소 전체를 통해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드리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 그리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원칙 및 개념에 의해서 이러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劉承旼 議員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사드가 없으면 아까 귀중한, 무려 7분 30초 중의 상당 기간 동안 40에서 150 사이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80% 이상 성공 가능성으로 요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이것은 국가전략의 대실패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킬체인이라든지 KAMD라든지 이러한 무기체계 확보사업을 2020년대 중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議員 장관님의 답변이 매우 원론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마는 장관님, 이런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영토를 보호하고 그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저는 사드 요격미사일이 하루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포인트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드는 PAC-3와 달리 방어하는 지역의 범위

가 무지 넓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저건 길이 200km, 부채꼴 사이의 각도는 60도 정도 되는 부채꼴을 한반도 남한에 3개를 그린 것인데 저 부채꼴 하나가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 부채꼴을 남한에 3개를 걸쳐 놔도 남한 전역이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사드 포대를 도입한다면 최소한 3개 포대는 도입해야 남한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사드 도입계획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또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지금 사드 포대는 3개 포대만 전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러한 사항은 참고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劉承旼 議員 장관님께서 ‘주한미군이 사드 도입하면 좋다.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도입하면 그것을 평택에 도입하든 오산에 도입하든 그것은 주한미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드입니다. 북한 핵미사일이 서울로 광주로 대구로 날아올 때 우리가 주한미군한테 그 평택에 배치된 사드를 우리 마음대로 요격에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드는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최소한 3개 포대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劉承旼 議員 지금 북한 핵미사일을 막는 데 별 효과도 없는 킬체인하고 KAMD를 한다고 17조 원을 쓰겠다는 이 정부가 사드 1개 포대에 1조 내지 2조 소요가 되면 3개 포대를 도입하면 3조 내지 6조가 드는데 그 돈이 없어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국민의 생명을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 이것은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劉承旼 議員 국방부장관 들어가시고 외교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께서 저와 국방부장관님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잘 들었습니다.

○劉承旼 議員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방부장관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劉承旼 議員 충분히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중국을 노골적으로 사드 도입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대답해 왔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중국 측에서 우리 측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런 보도가 나올 때 중국 측이 저희한테 문의도 해오면서 또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 측의 입장을 전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바란다 하는 입장을 항상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劉承旼 議員 중국의 반대논리는 앞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낮은 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사드가 쓸모가 없다’ 이것을 반복하고 또 사드 도입 때 수반되는 지상 X-Band 레이더, AN/TPY-2라는 지상 X-Band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드는 중국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국민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교부가 중국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결코 저고도로 날아오지 않는다. 이 점은 북한 스스로 발사한 노동미사일, 스커드미사일 궤적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해서 사드를 도입하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군사적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중국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이제까지 중국한테 이야기하던 흐리멍덩한 답변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결정이나 어떠한 협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중 간에 정상

차원에서 또 외교장관, 국방장관 여러 차원에서 신뢰에 입각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솔직한 전략적인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劉承旻 議員** 제 말씀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고, 총리 나오십시오.

총리님, 오늘 저의 결론은 '사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3개 포대를 도입해야 한다.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하고 러시아는 우리 외교가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결론에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우리 국가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서 국방부, 외교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께서 국방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 사드에 대한 도입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국방부에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劉承旻 議員**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유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는 원래 계획된 대로 2015년 12월에 인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북에서 3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등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큰 우려가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까지 연기를 하고, 그 능력·조건이 갖춰질 때는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심재권 의원** 저는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신 북한 핵 문제와의 관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우산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을 누차 성명해 왔습니다. 이번 SCM 6항에서도 핵우산 지속적인 확장, 전혀 전작권 문제와는 별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상호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에 들어서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의원** 어쨌든 간에 SCM에서 적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핵 사항과 우리 전작권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의 몇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확한 통계 수치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심재권 의원** 우리 국방비의 약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북한 1년 예산 전부를 통틀어 넣어도—2013년도 통계입니다—우리 국방비의 5분지 1도 안 됩니다.

미국은 오히려 우리 국군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이 당연히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고 오히려 미국 군사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산의 문제는 단순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에서는 비대칭전력의 증강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국방 능력이 있다는 점은 그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심재권 의원** 제가 물은 것은 미군 지도자들도 우리 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 비대칭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열세에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권 의원 지금 논의드린 것처럼 전작권 문제는 북한 핵과도 관계가 없고 우리 국방비는 북한의 무려 40배에 가깝고 그리고 미국 군사지도자들조차도 우리 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는 이 정부의 대외 의존적 사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엄정한 상태에 있을 때 국방을 튼튼히 할수록 더 이상 유비무환의 태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에서 감히 야욕을 못 갖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비대칭전력 부분에 있어서 열세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 조건을 갖추 때까지는 전작권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조건을 갖추 때까지. 이번 조건 보니까 한반도 및 역내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 군사주권을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언제쯤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17조 원을 들여서 우리가 전력을 강화하게 되면 2020년대 중반쯤은 가능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의원 한반도를 비롯해서 우리 동북아 역내 안정이, 우리 동북아 정치 상황이 그때쯤 안정되리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물론 상황 변화는 계속 되겠지만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 간다면 그때까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심재권 의원 총리님, 이렇게 막연한 연기는 사실상 우리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군사주권은 우리가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군 작전지휘의 구성을 달리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권 의원 국무회의 심의 거치셨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이것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고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도 국무회의 심의는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권 의원 우리 헌법 89조6항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이것 위헌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만약 향후 전작권이 실제로 전환될 시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에 전작권 전환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금은 전작권의 하나의 형태 변환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권 의원 총리님, 처음에는 우리가 맡긴 군사주권을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오는 시기를 조금 늦춘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찾아오려던 우리 주권을 되맡기는 건데 왜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쳐야 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되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추 때까지 연기하는 것입니다.

○심재권 의원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장비 구입비를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미국이 대가로서 뭘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심재권 의원 미사일 방어체제 17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형 전투기사업, 글로벌 호크, 이지스 구축함 등등 약 60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법률 전문가이십니다. 헌법 60조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주 중요한 사항들……

○심재권 의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이런 것은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헌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방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비준을 받으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심재권 의원 헌법학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조약 체결을 방지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둔

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저작권 전환 연기, 국회의 비준동의 받아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이것은 국방 당국 간, 기관 간의 약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권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헌법 사항을 들으시고도 이게 국회 비준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원래 저작권 전환에 대한 결정 시에도 국회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심재권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우는 다르지요. 우리가 처음에 맡길 때는 6·25 전란 중에 있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동의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맡기는 건데 동의받아야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다시 맡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심재권 의원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정책들 참 현란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DMZ 평화공원, 동북아 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말 구호는 현란합니다. 그런데 아무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 속담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 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로 해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프로세스 전략에 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남북 간의 협력을 쌓아 가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화를 통한 남북 현안들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를 거치고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권 의원 최근에 문제가 아니라 지난 2년간 아무것도 된 게 없지요. 지금 제가 적시한 이 정부의 통일 정책들, 남북관계 정책들, 이 가운데 북한 빼놓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북한 도외시해 놓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하나라

도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당연히 북에서 호응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손바닥을 서로 마주쳐야지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의원 최근 전단 살포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 규제하지 않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규제할 만한 근거 법이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국민의 안전이나 충돌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심재권 의원 근거 법이 없어서 규제를 못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규제 규정은 없습니다.

○심재권 의원 통일부장관, 통일부 대변인, 모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규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표현의 자유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규제할 근거 법이 없습니다.

○심재권 의원 연천이라든가 파주에 사는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분들은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안전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충돌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심재권 의원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있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헌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항공법, 남북교류협력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형법상 일반이적죄 부분 어느 것 하나도…… 전부 다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예로 들어볼까요? 세월호 문제 때문에 광화문에서 유가족들이, 시민단체가 ‘세월호법 타결해 달라’ 이렇게 전단 살포하려니까 막았지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도심에서, 그건 굉장히 국민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재권 의원 무슨 안전을 위협합니까? 누구의 안전을 위협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터지거나 그런 게 떨어져 낙하가 되었을 때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는 곳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위험을 야기할 수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경찰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권 의원** 총리님, 파주나 연천에서 날리는 전단은 지금 말한 그런 식의 위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심재권 의원** ‘문제가 있을 때는’이 아니라 우리 지금 광화문에서 날리려 할 때 궁색하게도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날아가다가 잘못 도로 위로 떨어져서 교통에 방해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 막았습니다.

똑같은 논리가,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데 왜 못 막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공법 같은 것도 검토를 했지만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

○**심재권 의원** 그러면……

○**국무총리 정홍원** 법에 그게 있기 때문에……

○**심재권 의원** 그러면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반 시민단체가 뿌릴 때도 허용해야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건 도심에서의 문제……

○**심재권 의원** 도심도 비행금지구역이고……

○**국무총리 정홍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재권 의원** 우리 접경지역도 똑같습니다. 법의 잣대는 같아야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될 때는 정부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심재권 의원** 저는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을 조장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신중한 자세, 현명한 태도를 취해 달라는 얘기를 관계부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권 의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는 수많은 법이 있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 그렇게 중요한 우리 국정현안인데도 그것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애기봉 철탑 철거에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철학도 이 전단 살포에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전혀 거기에 전단 살포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느니 또는 조장을 해야 되느니 하는 그런 의사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권 의원** 지난 2월 남북 간 고위급 회담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지를 합의했습니다. 그때 북한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건 예외다’ 이렇게 전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대북 비방이나 그런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심재권 의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 그런 합의를 할 때 북한 측에 대해서 ‘우리 정부끼리는 그걸 합의한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전단 날리는 건 그건 예외다’ 이렇게 통보를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얘기는 그동안 남북대화 기회에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권 의원** 그때에 합의 당시에 그런 게 전제됐었느냐고 묻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얘기는 해 왔습니다.

○**심재권 의원** 저는 그 당시 이 논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북한 측이 거기에 양해했다면, ‘당신들 그렇게 양해해 놓고 왜 이렇게 그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느냐?’ 우리가 항의해야지요.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동안 남북대화의 기회마다 여러 차례 저는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권 의원** 이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도움이 될 리는 없습니다.

○**심재권 의원** 이제 그렇게 도움될 일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규제법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정부의 철학이 전단 살포가 아니라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제 규제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들의 신체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 현행법에 명백한 위반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도 직접적인 규제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국민 안전과 여러 가지……

○심재권 의원 한정된 시간에 제가 그 법 가지고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죽 적시하잖습니까? 수많은 법이 규제할 수 있도록 마련을……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그 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권 의원 다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조금 더 의논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전시작전권 연기에 소극적이어 왔습니다. 사실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왜 전작권 연기에 동의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동안 양측의 협의과정에서 미국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의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국군 통제가 더욱 필요했기 때문에 동의했을 수 있다.

두 번째, 고가의 미국의 군사무기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무슨 고가의 무기나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는 조건이 있었다든지 그런 점은 전연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북관계의 상황을 미국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해를 한 것이지 그게 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심재권 의원 총리님께서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전작권 연기에 반대해 온 미국이 오로지 우리의 입장만을 추스려서, 북한 상황만을 살피서 그렇게 해서 연기에 동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미국도 충분히 우리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의원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지금 개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개정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금년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권 의원 그런데 또 보도 보니까 내년 4월로 미루어진다고 그래요.

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개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근거는 없고 그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개입을 할 때는 우리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도 우리나라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권 의원 일본이 침략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개입설이 나올 때는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 근거가 뭐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럴 가능성을 두고 논란을 하는 것이지 분명히 미국 입장도 그런 경우에 우리 동의 없이 주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권 의원 총리님, 미일 간에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고 미국은 우리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일본의 한반도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권 의원 동문서답하십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이것은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입장입니다. 우리의 동의나 승인이 없이 일본이 군사작전을 우리나라에서 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재권 의원 더 좀 논의 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심재권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이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

조치는 사실상 우리 주권의 포기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부들이 노력해 온 우리 군사주권의 회복을 한순간에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통제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훌륭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미국 군사 지도자들이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방예산은 작년의 경우 우리 국방예산의 3%밖에 안 됩니다. 한 해 북한예산 전부를 국방비에 투입해도 우리 국방비의 5분지 1밖에 안 됩니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의 보호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이 확고한 핵우산 정책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방위협의회의 성명 6항에서도 미국의 지속적인 핵우산 정책이 다짐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작권 연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직 이 정부의 대미 의존적 사고가 문제일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 주권을 훼손하고 우리 국군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규제할 법은 헌법을 위시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 격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심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손인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 손인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6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출범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613명의 병사들이 참혹하게 죽어갔는데 군 사령관이라는 최고지휘관은 음주 추태로 해임되는 군, 이러한 군의 적폐

를 혁신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또 지난 10월 23일 제46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정권을 유지시키는 생명줄인 핵,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선택의 의지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은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에 대한 명확한 통찰과 안보 모색을 통해서만 보장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제46차 한미안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결정됨을 환영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한미안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세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의 안보환경이 조성되는 문제이고, 둘째는 전작권 전환 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보완·지속능력을 제공하는 문제, 셋째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을 구비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손인춘 의원** 총리님, 전작권 전환의 조건, 즉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대응능력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무엇보다도 소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 능력을 구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인춘 의원** 이것은 곧 예산입니다.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대응능력 구비에 필요한 정확한 예산 추계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핵심 군사능력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5.5조 원으로 편성되었고 킬체인 등 전력 증강에는 23년까지 17조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춘 의원** 참 답답하신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예산추계 한번 없이 우리가 20년 중반 완료 선언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 아니십니까?

국방예산은 2010년~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4.3% 증가 수준에 그쳤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2007년 15%의 증가율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5%로 큰 폭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국방개혁

완료 시기는 네 번이 지연되었고 마흔아홉 번이나 전력화시기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43개 전력의 물량도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총리님, 더 이상 지연은 없다, 감축도 없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방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인춘 의원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15년 국방예산 7.9%, 방위력 개선비 11.8%의 증가율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방예산이 2.7%가 삭감된 5.2%, 방위력 개선비는 5.6%가 삭감된 6.7%가 정부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30년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완료하려면 15년~19년까지 국방중기계획 동안 국방예산은 연평균 7.2%의 증가율, 방위력 개선비는 10.6%의 증가율이 필요합니다.

총리께서도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춘 의원 그러나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국방예산과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수준이라면 국방중기계획 완료 시기인 19년까지 국방예산은 약 10조에서부터 방위력 개선비는 5.8조까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눈먼 킬체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킬체인, KAMD 사업은 두 배 가까이, 현재 10조에서 최소 17조까지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차세대 잠수함과 이지스함, 차세대 전투기 F-35와 한국형 전투기 등을 갖추려면 2000년대 중반까지 무기체계 도입으로 반영되는 예산이 57조 원 이상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 군의 군사능력과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확보를 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춘 의원 개발 중이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사업비의 총 규모까지 포함하면 수백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산 확보는 더욱 심각한데 총리님, 20년대 중반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춘 의원 그때까지 또 다시 미국에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그때에 가서 또 다시 국가주권

포기, 안보·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총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계획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국회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인춘 의원 우선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정확한 국방예산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셔서 이 문제를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인춘 의원 무엇보다도 총리님, 국방개혁은 물론 전작권의 성패가 달려 있는 7.9%의 증가율을 반영한 15년 국방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인춘 의원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도 15년 국방예산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예산 조성에 힘써 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과 정치권에 국방의 절박한 현실을 잘 설명드리고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총리님,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 깊은 이해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국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춘 의원 총리께 지역 현안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이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4년여 만에 취소되었습니다. 이유인즉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LH의 재무조건이 악화돼서 법에도 없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0년 동안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총리님,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구를 지정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철저히 짓밟다가 4년이 넘어서 지금 돈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고 취소해 버리는 이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과 사업시행자의 채무여건이 악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이 따른 것으로 생각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구 지정을 취소했습니다만 지난 9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취락정비사업이나 공업용지 조성 또 SOC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런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춘 의원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5000억이 넘는 담보대출과 이에 따른 이자로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 경매도 11년에서 14년도까지 73건이나 지금 경매가 발생했습니다.

총리님, 이렇듯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대출이자를 해결해 줄 법적근거 정말 없다고, 공무원적인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선부른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책임자들을 정말 색출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대출이자 연체 상황으로 경제적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토지보상법 원칙이나 판례에 의해서 직접적이고 특별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인정되어 있어서 이 경우는 바로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SOC 사업이나 취락정비사업 등 주변 사업을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인춘 의원 사업을 추진해 온 그런 공무원들은 정말 이거 색출해 봐야 됩니다. 생각 없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 더 당부드리자면 정부가 기피시설인 구로차량기지를 보금자리지역으로, 광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어느 상황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춘 의원 총리님, 광명시로 이전하더라도 이전 사유인 소음과 분진, 진동 등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선 강구하고 이걸 추진해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광명시로 이전된다면 지하철역 신설 등 그에 합당한 반대급부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8월 6일 무엇 때문에 민·관·군 함께 정부 차원의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최근 들어서 국민들께 깊은 심려를 드리는 여러 가지 악성 사고가 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군이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 자체의 시각에 의한 군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에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구해서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인춘 의원 군의 뿌리 깊은 적폐를 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오죽하면 감옥보다 못 한 군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참지 않으면 임병장처럼 되고, 참으면 윤 병장처럼 된다’는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노예가 아닙니다. 제복 입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부터가 군 혁신 이것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인식에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동의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인춘 의원 군은 전시를 대비해서 특별한 사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단장과 군단장의 지휘권과 인사권 안에 있는 검찰관과 재판관이 수사와 판결을 합니다. 지휘관은 확정된 형량도 감할 수 있는 감경권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검찰관과 재판관은 검찰이고 법관이기 이전에 제복을 입은 군인입니다. 결국 군인의 지위, 다른 한쪽은 법관의 양심이 수사와 판결에 함께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 군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유지하고 있고 그동안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이르러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유념해서 군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을 지금 모아서 개선해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판사·검찰관도 장교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들이 군판사와 검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직무상 또 신분상 독립성을 유지해서 재판과 수사에 임하도록 주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춘 의원** 결국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확한 사실 여부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은폐·조작·축소 의혹으로 군도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장관님,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이것을 꼭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춘 의원** 장관님, 우리 군의 사법제도는 1948년 국방경비법에 명시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도 지금 60년 지났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9차례나 개헌을 통해 정치·사회적 변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선진 헌법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사법제도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전시를 가정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제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법보다 지휘, 기본권보다 계급이 먼저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와 집착에서 이제 군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의 특수성은 유지하되 법과 양심으로 수사하고 판결할 수 있는 선진 사법제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께서 문제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가 군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자료의 수집 또 연구 또 의견의 청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설치한 그런 목적과 또 여러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변화요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춘 의원** 평시의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는 이제 폐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사이버

사령부 사건과 같이 보안이 중시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사건은 민간 사법과 공조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망사고의 경우는 민간 사법을 참여시켜 수사의 독립성, 재판과 판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제 군도 각종 은폐·조작·축소 의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8월 13일 ‘그동안 쌓여온 뿌리 깊은 적폐를 국가혁신과 국방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사법제도의 혁신을 통해 제복 입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실추된 군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용기 있는 결단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이 참 순수한 조직이고 군의 구성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국민으로부터 은폐·조작·축소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손인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록 공생적 발전관계 형성이라는 큰 숙제가 남았지만 향후 아시아 평화체계를 담보할 수 있는 중국과의 미래협력·안보협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관님, 중국은 1961년 북한과 조·중 우호협력상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과 같은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은 북한에 자동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고 진단하고는 있지만 수정 또는 폐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953년 한국과 한미상호방호조약을 체결한 미국 역시 전쟁 발발 시 자동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60년 지났는데 조약 폐기가 불가능하면 장관님, 수정을 통해 효력정지와 전쟁포기를 건인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쟁 도발국의 동맹국은 자동 개입을 포기한다는 형태로 수정한다면 장관님, 도발 시 동맹국이 자동 개입을 포기하였는데 감히 어떻게 도발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중·북 양자 간 문제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

치는 않습니다마는 유엔헌장에 그런 무력 사용의 금지에 관한 분명한 규정들이 있고 또 양국 모두 다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구속 받게 돼 있습니다.

○손인춘 의원 전쟁과 같은 급변사태 못지않게 정권 붕괴와 같은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태세도 한 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북한의 정권 붕괴, 즉 무정부 상태, 대혼란의 정국에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더욱 참담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은 물론 중국 국민들 역시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2월 중국은 백두산 일대 10만 주력부대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미 개입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 대량살상무기 방치, 중국 개입 등과 같이 예견된 문제들을 향후 장관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런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안보 또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중이 그 어느 때보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한·미·중 간에 협력과 대화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손인춘 의원 중국도 한·미에 안보협력과 평화안전을 주문하며 공생적 발전관계를 모색하는 시기, 한·미·중이 협의해서 대량살상무기 처리 매뉴얼을 미리 구축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급변사태 시에 합의된 매뉴얼에 따라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처리와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부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손인춘 의원 전쟁과 같은 급변사태, 정권 붕괴와 같은 급변사태를 대비해서 조약의 수정과 대량살상무기 처리 매뉴얼의 구축은 비핵화에 못지않게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것 말씀 한번 간

단하게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사항을 다 포함해 가지고 하여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늘 염두에 두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손인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지켜냈던 분단의 안보를 넘어서서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의 안보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60년간 쌓아 온 군 내부의 적폐를 들어내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인 국방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도 한미에 안보협력, 평화안전을 모색하는 시기, 전쟁과 같은 급변사태와 정권붕괴와 같은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태세에도 한 점 빈틈없어야 합니다.

외교·통일·안보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은 분단과 갈등이라는 큰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우리 후대에게는 통일 한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손인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회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부의장 이석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백군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입니다.

얼마 전 미국 항공기 내에서 이코노미석에 앉은 미국 군인이 제복을 구겨지지 않게 보관해 달라고 승무원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1등석 승객들이 군인에게 앞다퉈 자리를 양보하려 한 감동적인 미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국방부 국

정감사를 치르면서 국군 장병들의 뜨거운 열정과 애국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려스러웠던 사안도 확인되었습니다. 병영은 구타 및 악습이 잔존해 있고 무기개발사업은 부실과 비리에 연루되는 등 그 적폐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의 핵심인 국방개혁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남북 간 긴장은 고조되어 군사적 충돌의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상층부로부터 스스로 변화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정권 차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이 몇 건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작년엔 12건, 금년에 29건 도발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백군기 의원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서 지상, 해상, 공중을 가리지 않고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까.

우선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달 10일 대북전단 관련 남북 간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대북전단은 막을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전단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접경지역 인근 마을의 안보 상황과 국내 안보 상황 전반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북한은 민간단체 대북전단에 대해서 사격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기구에 대해서 조준 타격 등 공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충돌이 최소화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은 불안감이 좀 있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백군기 의원 또 이를 보는 국민들의 우려 또한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2항을 보면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제한하기도 합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백군기 의원 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 하나가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 한 발이었습니다.

중일전쟁은 노구교라는 작은 다리에서 벌어진 국지전이 원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풍선 날리기의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지혜롭게 통제할 수는 없는지요?

특히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려는 이 순간에 조금 제한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법적인 근거 없이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처에서 관계 단체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안전이나 충돌 우려가 있을 때는 통제 내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군기 의원 오늘 오전에 동료 의원들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항공법을 포함해서 이걸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고위급 회담이 그것 때문에 무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금년 3월에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 실행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희는 이런 북한의 태도 변화가 그동안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회일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대화 의지를 꾸준히 보이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노력하면 진정성을 갖고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백군기 의원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면 다행이고요.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히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과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군사 분야와 정치·외교·경제 분야를 두 트랙 개념의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우리 남북관계의 특수 사정으로 볼 때 그걸 두 트랙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앞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다음 국방부장관 나와 주세요.

지난 10월 7일 북한경비정 침범 당시 서해 NLL 부근에서 일어난 교전과 대응 사격에 대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해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격과 사격을 했다고 발표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 뒤에 언론에서는 조준 사격, 파괴 사격…… 뭐 군 수뇌부도 일부 좀 혼란스러웠어요, 초전에. 그리고 국민들도 아마 혼란스러운 용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용어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합참의 작전예규에는 경고 방송, 경고 사격, 대응 사격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해군에서는 대응 사격을 격과 사격이라는 용어로 계속 써 왔고 또 공군은 격추 사격 이런 것들로 써서 이해에 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육해공군이 동일하게 대응 사격에 해당하는 용어를 정립해서 쓰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래서 교전의 의도에 따라서 용어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에 북한이 대응 사격을 해 옴에 따라서 해군이 76mm, 40mm로 90여 발을 쏘았지요.

해군의 대응 사격 의도는 명중시킬 개념으로 사격한 조준 사격이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응 사격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백군기 의원 적 함정의 피해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함정의 피해 결과는 확인

된 바가 없고, 그 함정이 어선 사이로 회피해서 북상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사격을 못 한 것입니다.

○백군기 의원 영상 촬영해 놓은 거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백군기 의원 또 의아스러운 것은 사격 탄종이 충격 및 근접 폭발탄, 소이탄이었는데요. 명중시킬 의도로 했다면 철갑탄을 사용을 해야 됐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해군이 여러 탄종을 비올을 놓고서 이렇게 장전해 놓고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사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도 고풍탄이나 철갑탄 등이 일부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합참 확인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명중시킬 개념으로 사격을 했다면 현장에서 완전히 말 그대로 격과사격, 격과를 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마 해군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격을 했는데 76mm나 40mm 함포의 명중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거리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요망효과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백군기 의원 하여튼 훈련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군기 의원 그리고 10월 18·19일에 DMZ 내 도발 관련 사항인데요. 이것은 유엔사 정전을 위반한 사항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로서는 적이 MDL을 근소하게 월경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작전부대가 대응사격을 한 것입니다.

○백군기 의원 어떻게, 재발 방지를 위해 군정위에 의뢰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군정위에서 북측에도 정전협정 준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촉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백군기 의원 예.

다시 총리님 한번 나오시지요.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고 이번 전작권 환수 연기도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국가안보는 1%의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정방향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백군기 의원 본 의원도 그걸 동의하면서 다만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 정부의 의지가 문제가 있음을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총리님, 전작권을 언젠가는 인수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렇다면 걱정되는 게 좀 있어요. 1차 연기 때도 사실은 안보상황과 우리의 준비 부족이 큰 이유였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백군기 의원 그런데 1차 연기 이후에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8.7% 인상했던 국방예산은 5.3%대로 떨어졌거든요. 그것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백군기 의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로 국방개혁을 현 대통령께서는 8.9%의 예산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결재를 하신 거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액수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군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4~5%대의 증가 가지고는 또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안 됩니까?

또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는 대선공약 사항으로 전작권 전환을 천명하셨고 작년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기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작년, 원론적인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리고 나서 이제 금년 상그릴라 장관회담에서 우리가 연기를 제안했고 그것이 이번 SCM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대선공약은 파기가 된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공약의 파기라기보다는 지금 조건이 아직 맞지 않으니까 조건을 우리가 빨리

갖추고 전작권을 원래 약속대로 넘겨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의원 아니, 뭐 그건 인정하는데 여하튼 공약 자체는 지금 파기가 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파기라기보다는 연기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의원 아니, 환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연기를 한 거니까 그 자체는 지금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백군기 의원 예.

우리 장관 나와 주세요.

이렇게 상황이 변화된 이유가 뭐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도 2월 12일 날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강행되고 3차 핵실험이 갖는 핵의 현실화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변화, 또 3월 4월에 연이어서 북측에서 발표한 정전협정의 파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도발적인 그런 언사와 또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바꿔 놨다, 그래서 거기에 유념하면서 그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만한 우리의 군사적 준비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기보다는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백군기 의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북한의 핵 소형화 및 농축우라늄에 대한 우려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업무보고 때는 계획대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또 핵에 대한 대비는 전작권 전환과 관계없이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억제해왔고 또 장관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군기 의원 한미동맹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핵억제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고 방향입니다마는 최소한도의 우리의 억제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양해 해주시면……

○백군기 의원 미군이 주도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역할,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백군기 의원 또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곡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능력을 판단할 때 한국군 단독이나, 한미동맹이나, 이것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동맹의 능력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이 철수하고 연합지휘구조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연합지휘구조가 변형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백군기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군은 그대로 한국에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충실히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연합지휘구조는 한국 주도, 미국 보조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대개 그런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봅니다.

○백군기 의원 하여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 논란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전작권 무기한 연기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장관님, 공감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큰 틀에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백군기 의원 국방개혁은 그 추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계획된 전력 증강이 지체되는 상황하에서 이미 상당한 병력 감축과 부대 해체를 진행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일정 수준 진행이 됐습니다.

○백군기 의원 장관님,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 가용재원이지요?

국방개혁 로드맵을 보면 병력 감축과 전력화 시기, 간부 증원, 부대 개편 등의 목표연도가 각각 지금 상이하게 돼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방개

혁은 전력 증강과 감축이 최소한 선후가 되거나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하여튼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군의 의지와 달리 목표연도를 뒤늦게 이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에 위치한 모 부대는 기갑부대가 장갑차도 없이 부대 개편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한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력 수 대비 52%, 개혁소요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군기 의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백군기 의원 장관님, ‘군피아’라는 용어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말 대다수의 장병들, 직업군인들 본연의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백군기 의원 우리 통영함 문제인데요, 2억 원 짜리 수중음파탐지기를 41억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작동도 되지 않고, 군용침낭은 30여 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상용품보다 훨씬 비싸고, 해군고속단정은 3년간 16척에 62차례나 고장이 났고, 또 잠수함 연료전지는 인수 후에 29차례나 작동이 정지되었어도 시험하고 합격관정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이외에도 규격 미달 부품의 시험 성적서 조작, 자격 미달 업체의 불법하도급, 엉터리 정비 및 가격 부풀리기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비역 군인들이 방산업체에 많이 활동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백군기 의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우리나라도 뭐 그렇습니다.

○백군기 의원 파행이 예상되는 KF-16 성능개량사업의 담당 사업부장 친형이 수주업체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군기 의원** 또 방사청이 무기중개상 배제를 공식발표한 해상작전헬기 사업설명회에 무기중개상이 참가한 사실도 있고 이 중개상에는 방사청 및 각 군의 고위직과 현직 군 수뇌부의 동기생이 근무 중이고 부회장이 또 예비역 소장이고요.

장관님, 현실적으로 무기획득사업에 이러한 무기중개상이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노력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백군기 의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무기중개상의 완전한 배제가 불가능하면 양성화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철저하게 등록제로 운영해서 해당 사업팀과 조금이라도 군맥이 얽힌 인사가 있다면 방사청에서 집중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백군기 의원** 병영 문화 혁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쯤 아파 헤아려 보았을 겁니다. 인명을 중시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가 약한 군대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것이 진정한……

○**백군기 의원** 강한 군대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강한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런데 장관님, 지난 9월 한 언론에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건양대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간부의 절반이 병사들 인권이 개선되면 군기가 나빠진다고 답변했어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동의하지 않고 일부 간부들이 갖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백군기 의원**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군기 의원**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 지켜야 될 가치를 소중히 했을 때 강한 전투력이 발휘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군기 의원** 우리 대한민국 군이 강한 것은 인명 중시와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영 환경도 문제입니다.

지금 일선 대대급 부대를 방문하면 실제 축구장 절반도 안 되는 연병장에 골대 하나 덩그러니 있고 축구공 몇 개 던져주고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전방의 전투부대 애들 보면 대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앞으로 병영시설 개선을 설계할 때는 체육문화공간을 표준시설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지금까지 병영시설 개선이 의식주의 관점에서 진행돼 왔는데요, 앞으로 신세대 장병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그리고 병사들에게 이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요. 병사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의존하는 게 전화 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방부 대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가, 병사들이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아프다는 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육체가 아플 때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들이 제때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 아주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상담관을 추가로 배치한다든지 또는 전화기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병사들이 자기의 지휘자, 지휘관들에게 그런 사실을 말하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지휘노력을 경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장관님, 지난번 국방위 때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가 있어 가지고 국방 옴부즈맨제도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옴부즈맨의 필요성은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기관에 또는 부처에 위치시키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우리 장관님의 아주 진전된 사고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합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국감 때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장께 ‘인권위는 국방부에 대해 권고 수준의 권한만 있지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답변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정말 그런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사 인권 문제 못지않게 간부들의 인권 보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장관님은 부사관 및 초급장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초급장교 또 초급부사관들이 우리 군의 허리이고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병영의 안정이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초급 간부의 충원 또 그들에 대한 좋은 교육, 그것을 통한 병영의 안정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또 고급장교들에 대한 인권도 중요한데요. 지난번 신현돈 예비역대장의 전역에 관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확인한 결과 음주는 했으나 추태는 없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전역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러 가지 보도가 된 것처럼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6월 19일 날 모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동창들과 저녁을 먹고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귀로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문제시되자 본인의 명예와 고급 군인의, 장성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이 더 확산되기 전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소문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상당히 회화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자기가 좀 바로잡아 주기를 언론에 요청해서 요즘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군기 의원** 그러면 장관님 확실히 얘기해 주실 게 본인의 자의에 의한 전역입니까, 아니면 어디 청와대나 이런 데서 전역을 시키라는 중용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본인이 그런 사실,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알고 저와 대화 과정에서 본인이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백군기 의원** 본인의 의사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군기 의원** 그것은 두 번 다시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본인이 지금도 전역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사실대로 자기를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언론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군기 의원** 고급장교들의 인권 문제도 대단히 고려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백군기 의원**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은 국민의 신뢰와 사기를 먹고 삽니다. 군은 이러한 신뢰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안보의 주체인 군을 좀 더 지켜보고 격려하며 병영문화 혁신에 지혜를 모으고 안보역량 강화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총력안보로 가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백군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님과 외교·국방·통일부 장관님!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이상일입니다.

점심을 자시고 나른해지는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채워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만추가 무르익고 있는데 가을의 시 하나 들려드리고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산 도라지꽃빛 가을 하늘 아래 전원은 풍양과 결실로 익고, 고추는 태양을 날마다 닦아간다”

한하운 선생의 국토편력에 나오는 시 일부입니다.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이 음풍농월을 할 만큼 녹록치는 않지만 한하운 선생의 시가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정겨운 것이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적 구성의 큰 변화가 없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평가를 해 보고 미흡하다고 지적받는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전달하려 합니다.

국무총리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스크린을 보시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기자들의 평가를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중앙 언론사에서 국방부·외교부·통일부 그리고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 111명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물어봤는데 그렇게 좋게 안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상일 의원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52.3%가량 됩니다. 보통이 25%, 긍정이 23% 정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까 주관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자의 한 77%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 많은 구상들이 나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서는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원래 언론이 좀 짜게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 국민 중에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총리님 말씀대로 언론인들이 좀 짜게 주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점수를 한번 매겨 달라고 그랬더니 54점이 나왔는데,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좀 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민망한 결과인데 언론인이 매긴 평가라서 저것도 한번 받아보시고 좀 성찰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

외교·안보팀의 팀워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36%, 긍정적인 의견이 한 6%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좀 비판적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뭔가 성과를 못 내면서 또 이렇게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런 박한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앞으로 통찰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리님은 이런 점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NSC를 중심으로 외교·통일정책의 조율을 하고 있고 의견 교환이나 정책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도출되지 않다 보니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NSC의 서로 소통과 조율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국민의 기대를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기자들이 낸 의견은 이런 겁니다. 통일부 역할의 리포지셔닝, 경험 있는 당국자 부족 등 전문성 부족 해결, 대북라인 인사 교체, 이런 의견들을 내셨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상일 의원 총리님, 동해에 대해서 우리는 영문 표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East Sea’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저렇게 ‘East Sea’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본다면 “저것 어느 나라 동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이상일 의원 그래서 저는 동해 영문 표기를 ‘East Sea of Korea’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외국인들이 한국의 영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오랫동안 굳어 있는 용어가 다시 수정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질문 원고를 좀 늦게 받아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한

변……

○**이상일 의원** 일본은 지금 동해를 일본해라고 그러면서 ‘Sea of Japan’이라고 합니다. ‘Japan’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East Sea’ 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알지만 외국인들은 ‘어느 나라 동해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이상일 의원** 그다음에 중국이 말이지요, 동지나해, 중국은 영문 표기로 ‘East China Sea’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동해라고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베트남도 자기 동쪽 바다를 동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East Sea’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ast Sea’라고 하면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ast Sea of Korea’라고 해야 외국인들이 “아, 한국의 동해구나. 한국의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바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다시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이번 국감 때 동북아재단 홈페이지에 동해 병기의 모범사례로 예시를 한 겁니다. ‘Sea of Japan’이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 ‘East Sea’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외국 지도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잘된 표기로 예시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East Sea’ 또는 ‘East Sea of Korea’를 앞에 세우고 괄호 열고 ‘Sea of Japan’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학준 이사장도 동의를 했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렇게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표기를 변경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검토 자료로 삼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예, 아마 표기 변경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면요, 동해와 독도를 ‘Sea of Japan’ 또는 그다음에 ‘다케시마’ 이렇게 표기한 책들이 80에서 90%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구매할 때 그것을 제대로 안 보고 그런 구매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책들을

보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한국에서 배워도 동해는 ‘Sea of Japan’이라고 생각하고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혼란이 있는 것은 아주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일 의원** 그래서 우리 교육부 소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도 각 대학에 이야기를 해서 책을 구매할 때 저런 점도 신경을 쓰고 또 표기 수정도 요청하고 수정이 안 될 경우 같은 내용이라면 우리에게 맞는, 동해 표기가 제대로 된, 독도 표기가 제대로 된 그런 책들을 구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하버드대학에 라몬트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서에게 우리 한 NGO단체가 찾아가서 ‘왜 하버드대학의 지도도 대부분 일본해로 되어 있고 다케시마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었더니 이 사서가 ‘어떤 한국 사람도 나에게 동해나 독도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것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우리 오전에 총리님께서 판문점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것,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은 조금 그런 대목에서는 혼선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님께서 시정을 잘해 주셨다고 보고요.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상일 의원** 그런데 남북관계가 계속 단절되고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양쪽에 모두 큰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풀리는 조짐을 좀 보였다가 다시 경색된 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푸실 생각이십니

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가 일관된 정책으로 대화를 통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정신을 갖고 계속 가면서 또 인도적인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대로 해결해 가는 그런 정성을 보이면 북에서도 호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일 의원**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차관급 당국 대화 수준으로는 사실은 밀도 있는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밀도 있는 대화를 하려면 저는 차관급 대화 수준보다는 높은 고위급 특사가 교환되는 이런 방식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고위급 특사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못 풀어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일 의원** 남북에서 각각 100여 명씩 2박 3일간 정도 만나는 현재 이산가족 만남, 이견 좁이벤트성이고 이런 형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등으로 분산한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할 이산가족교류재단(가칭), 이런 재단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좀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산가족이 이렇게 만나고 결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이나 지금 현재 기구에서 좀 더 그 부분을 갖다가 전담해서 할 것인지, 새로운 기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오전 답변 중에 하나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연합사 용산 잔류 문제하고 210여단 동두천 잔류와 관련해서 양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다, 우리가 먼저 요청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상일 의원** 그렇다면 미국이 먼저 요청한 건

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의견일치가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의원** 감사합니다.

한민구 장관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장관님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도 조금 부정적입니다. 물론 지금 일을 하신 지 긴 기간이 안 되었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한 자릿수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고, 저는 열심히 그 일을 처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기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충족이 안 돼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제가 자세한 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략권 전환 재연기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 군사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략권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일 의원** 그러면 실제 목표 연도를 정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조건에 의한 전략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실천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일 의원** 그러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조건이 충족이 못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핵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핵화가 되거나 또는 통일이 달성되거나 그러면 또 이 문제는 더 조기에 전환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 물론 통일은 그렇지만 북한이 비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핵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략권 전환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해서 대응하면서 전환조건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전환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 킬체인은 30분 내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우리가 포착해서 제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상일 의원** 그런데 지금 북한이 100대에서 200대가량 미사일 발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리 저리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공격할 텐데 그걸 진짜로 포착해서 제압할 수 있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미사일에 대응해서는 탐지, 교란, 방어, 파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동맹이 자산을 함께 운용하면서 대응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미사일 작전기지 일대를 감시정찰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목표 수준에도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전력도 확보하고 연습도 하고 해서 그러한 작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일 의원** 국방부에 대한 평가가 좀 낮은 건 기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행정부처 중에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곳이 국방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는 수도 없이 들 수가 있습니다. 노크 귀순부터…… 제가 그래픽을 다 준비해 왔지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이 문제, 이게 사실은 너무나 묵은 버릇이고 못된 버릇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국방부는 신뢰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저도 장관으로서 국방부가 정직을 의심받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것이 일부러 거짓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다단계를 거쳐서 보고를 하고 또 발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미숙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국민에게 저런 인식을 갖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윤병세 장관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기자들 평가를 좀 알려 드리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 장관님께서서는 기자들 한 59% 정도가 보통이라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긍정이 부정보다는 조금 많고요.

그런데 기자들 지적하는 게 존재감이 없고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이런 말씀을 제 입으로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매년 국민 여론조사하게 되면 외교 분야가 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지 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도 정부 업무평가 때도 외교부가 최우수 부처의 하나로 꼽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한국과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라고 보느냐, 왜 EU가 아시아에서 일본보다도 한국을 더 중시하느냐, 아세안 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인권이사회 이사국, 이 모든 국제 분야에서 왜, 글로벌 어젠다에서 한국이 얼마나 많이 주도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그러한 국내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 차별화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일 의원** 설문 결과를 알려 드리지 않았는데 어디서 정보를 입수하셨는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네요.

지난달 30일 외교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좀 더 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아직 협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3대 목표로 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또 원전 공급에 기여해야 된다는 측면 또 원전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진적인 원자력 위상에 맞는 그런 수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 외교부가 레토릭에는 뛰어난데 나중에 뚜껑을 열면 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허용되느냐 아니냐의 이분법 방식이 아니고 쌍방향으로 상호성을 갖는 형태로 협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쌍방향으로 상호성을 갖는 형태라는 건 어떤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동안에 현재의 한미 원

자력협정은 미국이 우리의 원자력 발전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통제하거나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시대적인 협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저희가 추진할 협정은 사실상 전면적인 개선을 하면서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가 될 경우에 어떻게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는지, 왜 호혜적인지 또 선진적인지 이런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일 의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시대에 뒤떨어진 원자력 협정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포함해서 저희의 3대 목표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익에 걸맞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상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일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리 통일부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서도 평가 결과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부정적인 평가가 세 분 중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셨나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봤습니다.

혹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답변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평가가 낮았는데 더 평가가 낮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저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는 남북관계가 우리 정부 출범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장기간의 경색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아마 그런 점들이 언론인들에게 깊이 각인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여 가까이 통일부나 또 제가 필요한 역할은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일 의원** 남북관계가 안 풀려 가지고 장관님께서 아마 억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자들 지적은 ‘장관님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지금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점은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과연 우리 통일부가 이 대북정보와 관련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 저만의 의심은 아닐 거예요. 지난번 김정은의 이 잠행기간 40일 됐지요. 그동안에도 통일부는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략적 모호성도 있겠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걸 충족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답답한 국민이 지속이 됐습니다. 언론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각종 설을 쓰고 있는데도 통일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대북정보 제대로,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사실 통일부가 그 대북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그런 부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를 수집하는 우리 정부부처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최근의 북한의 그 내부 정세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또한 그 정보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 정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해 드렸지만 구체적으로는 사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정보를 다루는 부처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할 때는 최대한 국민들께 정보를 드리고 좀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자들 지적은 ‘통일부의 존재감, 우리 장관님의 존재감이 좀 약하다’ 그다음에 ‘대북정보 공유 관련해서도 통일부가 너무 약해서 제대로 밀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잘 유념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전이 없는 대북관계, 군에서 잇따른 사고와 비리 등으로 우리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들과 언론의 평가는 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국민과 언론과 소통하면서 보다 정직하고 정정당당하게 일을 하면 국민의 많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실수나 잘못을 감추

려고 하는 데서 생깁니다. 실수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새롭게 새로운 자세로 다시 일하려는 그런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면 국민들은 질타보다는 기대를 다시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안보 라인은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꼼꼼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은 버릇……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묵은 허물 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낡은 옷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 옷을 입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이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중원 출신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한미 국방부장관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군대의 지휘와 작전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한반도 무기경쟁 프로세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패권 다툼에 우리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주권의 포기이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저는 대통령 공약대로 2015년 전환준비를 요구합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한민구 국방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지난 10월 23일 한미 국방부장관 간의 연례안보회의에서 동두천 미군기지에 주한미군 210화력여단을 계속 남기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김미희 의원** 이 합의가 있기 전에는 동두천 미군기지를 언제까지 반환받기로 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LPP에 의해서 미군기지는

평택에 기지가 완성되면 그대로 옮기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이번 회의에서 동두천 미군기지의 반환시기를 결정하지 못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210화력여단이 우리의 대체전력이 완성되는 2020년까지는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이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또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현 위치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미희 의원**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라고 하던데 그 ‘때’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우리 수도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위협입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한미 연합군은 대화력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화력전의 자산 중에 그 210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원래 LPP 계획대로 하면 그 210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그 210여단을 대체할 우리의 다련장대대의 전력증강 계획이 한 2020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 여단을 잔류시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미희 의원** 장관께서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의 임무를 2005년 주한미군이 한국군으로 이양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러면 이미 이양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하겠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 대화력전 임무수행의 한국군으로의 2005년도 이양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에 평시에 여러 가지 작전 형태에 대한 주도·지원 관계를 조정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책임만 한국군이 맡기로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력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미희 의원** 작년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행한 ‘한미동맹 60년사’ 321쪽을 보면요, 대화력전 임무가 미 2사단에서 한국군 제3군사령부로 전환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320쪽에 아래 각주를 보면 라포트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작년 5월에 성공적인 임무 전환이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올해 7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우리군

의 대응전략 및 대응 무기체계,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실시간 감시 및 타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 어디에도 다시 동두천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는 없네요. 동두천으로 오지 않아도 이미 현재 상태에서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저기 나와 있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 그것은 군사기술적인 문제라서 좀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인데, 그 책에서 적시되고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것처럼 대화력전 수행 임무의 주체가 미 보병 제2사단에서 한국군 제3군사령부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3군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산들, 자산의 문제는 210화력여단이 있는데 그 화력여단이 평택으로 가면 그 화력여단만큼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시에?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우리의 전력이 2020년까지 확보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미희 의원 대화력전 임무 이양은 2002년 말에 미군이 한국군에 제안한 것입니다. 2005년 미국이 전달한 주한미군 감축 기본계획안에 보면 대화력전 부대가 포함되었고 이를 철수시켜서 이라크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그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막대한 국방비가 증액된 것이지요. 주한미군 대화력전 부대가 없어도 우리 군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완성·검증을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210여단은 현 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2020년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군의 전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이미 떠나기로 하고 그것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완료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남기로 한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210여단이 떠나기로 하고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희 의원 원래 비워 주기로 한 거잖아요, 동두천 미군 기지를?

○국방부장관 한민구 비워 주기로 한 건데 LPP 협정에도 '미 2사단의 평택으로의 이전은 그 정확한 시기를 한미 양국 국가 통수부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필요한 2020년까지 더 남아 있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이라크전쟁 10년 동안 미국은 재정위기로 인해서 2021년까지 매년 자동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미국 정부 예산의 절반이 국방비입니다. 시퀘스터가 끝나는 2021년에는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이사할 돈이 마련될까요? 미국이 동두천에서 미군을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은 우리 군의 능력 구비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의 예산 사정이 풀리는 것입니다. 즉 이사비용이 생겨야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이 2004년 철수했던 화학대대를 재배치한다는 보도를 보십시오. 이 화학대대가 9년 만에 다시 의정부 캠프 스탠리로 들어오자 의정부시의 회에서는 지자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면서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미희 의원 당시 의정부시의회는 9년 만에 돌아온 미군을 보면서 이러다가 기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회의 우려가 지금 동두천에서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화학대대의 재배치에 대한 미군 내의 언론 성조지의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미 육군 대변인 웨인 홀은 화학대대가 한국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기지운영비용 연간 180만 달러, 약 19억 원이 절감·보전된다는 계산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에게는 줄어드는 유지비용 19억 원이 결국은 우리 국민이 더 큰 부담으로 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방위비분담금 505억 원 증액에 합의해서 9200억 원 주기로 했지요? 방위비분담금으로 각종 시설과 장비유지비용도 지원해 줍니다. 한마디 증액도 보장받았고, 미군에게 한국 같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철수했다가 은근슬쩍 다시 들어오고 예산 삭감, 비용 절감하려고 약속을 어기고 기지를 계속 쓰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 심보입니다. 이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서 합의해 주다니 동두천 주민들에게 죄송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합의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합의일정과 계획대로 동두천 미군기지를 반

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를 철회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철회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존재와 그 가치, 의의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전략적 이익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미희 의원** 용산 미군기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전작권전환 환수 이전까지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기존에 남기기로 합의한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굳이 연합사 건물과 작전센터, 미8군사령부 건물을 남기려는 이유는 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 원래 한미 양국이 2015년도 12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해 왔던 계획에 의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으로 변화되면서 연합사가 존치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합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평택에는 연합사령부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존치하고 있는 연합사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를 군사적인 면, 경제적인 면, 여러 면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 두는 것이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김미희 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남기기로 한, 합의한 그런 건물이나 부지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평택에 9조 원을 쏟아붓고도 지금 용산공원의 청사진은 기형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합의를 철회하기를 요구합니다.

장관님, 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와 정화 비용도 이 법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미군기지를 잔류시키려면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현재 용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은 YRP라고 하는 그 협정과 그것을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의 개정 문제는 저는 다시 어떤 개정할 소요가 있는지 지금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러니까 용산기지가나 동두천기지가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땅을 매각하는 그러한 돈으로 평택기지 설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법을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기도 2017년까지 모든 게 완료될 거라 생각하고 2018년까지로 했지만 지금대로 한다면 2020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도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만약에 법의 개정 소요가 있으면 고쳐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선 먼저 용산기지는 그것을 매각해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산기지는 그냥 국방부에서 국토부로 관리 주체가 변경되고 그리고 국토부가 그것을 공원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동두천의 경우는 그것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LPP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몇 년 지연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법 개정을 반드시 하고 나서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법의 원인이 되었던 용산기지 이전협정이나 연합토지 관리계획 개정협정도 역시 그것을 바꾸는 것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 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YRP와 LPP 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것인데 현재 전환 시기가 조건에 의해서 연계되었을 뿐이지 그 전환을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법적 검토결론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김미희 의원** 이번 SCM 합의는 2004년 국회

의 비준동의를 이미 받은 한미 간 합의를 파기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평택기지는 2004년 합의대로 확장하면서 동두천과 용산 다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SCM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국민들도 모르고 국무회의에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법 개정이나 국회의 비준동의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시겠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 간에 외교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문제기 때문에 미리 소상히 다 보고를 못 드렸습시다마는 지금부터 협의가 끝난 이후부터 국민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보고사항은 그것이 아니었다 하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김미희 의원** 전시는 평시든 자기 나라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은 주권국가의 기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대선 때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에 의한다면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하게 수호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차질을 가져온 SCM 합의에 대해서 단 한마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계시는지요. 당장 이번 합의를 철회하고 대선 공약대로 2015년까지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장관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국민들의 거둬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5일과 31일 경기도 군포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조치 전에는 어떠한 남북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시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조성된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공간에서 열렸던 남북대화의 물꼬를 2차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이어갈 뻔했다가 지금 물거품이 되어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전단 하나로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대북전단 문제는 관계부처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법상으로 직접적인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충돌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희 의원** 여론조사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70%의 국민들이 정부가 막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는 막고 싶으나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우리가 검토해 본 바에는 직접적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러면 그런 법을 만들면 되겠네요.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없도록 정부와 국회의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법을 만들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건 입법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 의원** 그러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기를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저는 지금 당장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제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7·4 남북공동성명과 10·4 선언에서 밝힌 합의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 상호간에 일체의 상호 비방을 중단하는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10·4 선언을 통해서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강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런 합의정신으로 남과 북이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먼저 이런 취지로 북한에 제안하고 대화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모든 중상·비방을 중단하고 심리전도 중단하자는 이 작은 실천에서부터 남북화해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저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 국민들께서 확실히 알아 주셔야 될 것이 우리 남쪽 정부에서 북을 비방한 일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북에서 온갖 비방과 그걸 했을 뿐이지 우리 정부가 북을 비방한 일은 한 번도 없고 그 합의정신을 우리 정부가 깨트린 일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비방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도 북한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비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단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가지요. 지금……

○**김미희 의원** 그러면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는 선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는 지켜 왔습니다. 그것 어떻게…… 정부가 아무, 거기에 대해서 깨트린 일 없고 우리가 어디 북에 대해서 도발한 일 있습니까?

○**김미희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남북화해의 새로운 물꼬를 트기 위해서 지난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북측의 고위급 인사가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측에서 특사파견을 하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단계에서 특사파견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대화가 진전 되면 무엇이든지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도발을 어느 쪽에서 했으며 어떤 상황을 가져 왔는지 하는 문제하고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하는 것 그 이상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리 뭐가 잘못된 것만 자꾸 지적을 하는 식의, 그것도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얘기로 그렇게 하시면 국민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희 의원** 대북전단을 막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데 그것을 막지 않는 것 그것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태도가 아닙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비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부처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와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남북관계가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꼬여 가는지 하는 것을 좀 직시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제가 오늘 질의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질의를 했더니 시간이 3분이나 남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질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넘기게 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갑 출신의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와 함께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양천갑 지역의 28만 명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길정우 의원입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책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교, 국방, 남북관계는 국가이익이 부딪치는 엄중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전문가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적 정서에 따라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외교·안보·통일 세 분야 모두 뚜렷한 전략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채 사태 수습이나 사태 대응적인 자세에 머물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들 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의 한계에 대해서 주제 파악부터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주 국감에서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을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길정우 의원** 장관이 말하는 국민적 공감대,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동안에 저희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외교정책에 대해서, 대외 정책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들의 여론이 나와 있었다고 봅니다. 또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동안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길정우 의원** 지난 3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수년간의 조사 결과에서 한국인의 한일관계 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답이, 일본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던 망언을 하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답이 54.9%입니다. 또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된다는 주장 역시 과반이 훨씬 넘는 62.8%가 공감했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아베 총리에 호감을 갖지 않은 한국인들도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군사·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분들도 61.7%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외교 당국자들보다 현상을 더 엄중하게,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현재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인, 역사 퇴행적인 행동에 기인한다는 그런 인식과 분석은, 그것은 미국 EU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많은 여론 주도층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또 북핵 문제라든가 전략적인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공조를 하고 또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서로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그런 정책을 취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물론 다양한 조사가 있습니다마는 또 예를 들면 9월 말에 다른, 내일신문 인터뷰 같은 경우는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90%가 넘는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또 말씀하신 아산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관계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같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대일관계의 중요성

을 감안하면서 또 국민 여론들도 감안하면서 과거사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내년이 수교 50주년이라는 중요한 해기 때문에 그러한 해를 계기로 해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정우 의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무총리님께 물겠습니다.

먼저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기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아시다시피 산케이신문은 그렇게 인기 있는 신문 아닙니다. 잦은 오보, 편향적인 보도, 일본 안에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이런 신문기자를 우리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신문이나 이 기사를 굉장히 화제 인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외의 언론기관·단체로부터 적지 않은 항의를 받았습니까?

총리님, 잘한 결정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내법에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그 언론의 비중이 높다 낮다에 따라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명백하고 또 위법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내법 저촉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정우 의원** 산케이 신문기자가 인용했던 국내 보도, 칼럼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보도에 대해서요?

○**길정우 의원** 산케이 신문기자가 인용했던 한국 신문에 글을 쓴 한국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언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그 조치는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길정우 의원** 본 의원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부의 결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건에 관련해서 관련 부처 간에 논의를 하면서 기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대의견을 낸 정부부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것은 수사기관의 전권사항이고 특히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권적으로 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어떤 의견을 주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도리이기 때문에 정부 내의 어떤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정우 의원**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두 문제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부가 다루는 입장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위안부 문제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문제이고 또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가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행위나 노역한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정우 의원**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 대일청구 8개 요강 항목에 이미 포함되었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해결된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정우 의원** 하지만 지난 2012년 5월에 한국의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길정우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법원에 송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길정우 의원** 우리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협정에 대해서 우리의 국내 사법부가 그것도 50년이 지난 지금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현재의 잣대로 다시 시비를 가리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협정, 약속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당시 일본 정부의 강제성이나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은 시한이 없이 제기할 수 있고 또 제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하겠다면 저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정 당시 우리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또 진작 보상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부터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길정우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외교부장관 나오시지요.

위안부 문제는 다릅니다, 장관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두 문제 분리해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정부로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 양자 차원의 것을 넘어서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로 지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국제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유엔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조치가 있었고 또 미국 의회 상·하 양원에서도 조치가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호주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오늘 방한 중인 화란 국왕이 또 일본에 가서 하는 그런 발언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계기에 저희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이런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고 또 양자적인 차원에서도 일본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길정우 의원**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서 위로하셨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나신 적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 일본 측 고위인사들을 만나시거나 관련되는 외국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길정우 의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남은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현재까지 그런 만남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길정우 의원** 다음은 이어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은 독도 그리고 센카쿠, 중국어로는 댜오위다오라고 합니다마는, 그리고 이어도 문제의 연관성 그리고 한중일 3국 사이에서의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일 간의 센카쿠(다오위다오)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고 작년 11월에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이 지나서 중국이 선포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포함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움직이고 법석 떠는 사태 대응적인 외교의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떠온 지도에 이어도가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전과 이후의 지도입니다. 작년 12월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전에 우리 식별구역에서 이어도는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한중일 3국이 선포한 중첩된 구역 안에 이어도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경황이 없을 51년 당시에 우리 해군은 이어도 탐사에 나서서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 표지를 수면 아래 암초에 가라앉히고 돌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에 독도와 이어도를 포함하는 이승만 라인, 소위 평화선을 공표합니다. 이곳에 지금은 보시다시피 2003년에 완공한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의 한중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2009년에 중단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내년 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도, 이어도 차이점 무엇입니까?

그리고 장관은 이 이어도 문제와 관련된 해양경계 획정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독도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의 주권이 미치는 분명한 영토입니다마는 이어도 문제는 그동안에 국내에서 다소 많이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 정부도 영유권 문제와는 관계없다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해양경비에 관련된 사항이지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양법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그러한 조항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지난번 정상회담 때 합의한 대로 내년에 한중 양국 간에 EEZ 경계 획정 협상이 시작되게 되면 이 EEZ 수역이 당연히 저희 수역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 수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해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1996~2008년까지 열네 차례나 한중 간에 논의를 했는데도 합의를 못 한 사항이

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잘 알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독도 영유권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가운데 미국 정부의 비밀문건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51년 8월에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딘 러스크가 국무장관을 대신해서 우리 양유찬 주미대사한테 보낸 서한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과량도, 이어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한국의 권한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문건은 아닐지라도 현재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주장에 원인 제공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한일 양국 간의 갈등에 중립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합당합니까? 위선적인 태도 아닙니까? 장관 생각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본 측이 러스크 서한을 자기네 나름대로 악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러스크 서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일 양국 간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끼어들고 싶어하질 않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이거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저희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와 관련하여 국감 당시에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부끄러워할 일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보상황의 변화만을 핑계 삼는 것도 사실 떼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국민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자주 국방력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화력, 동맹국의 핵우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할 역량이 되질 않는다, 답답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국민 앞에 호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하는 것인데 다만 여러 가지 안보상황의 변화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우리 군의 준비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은 전략적으로 이것을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것이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불가결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길정우 의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작권 환수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전작권 환수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길정우 의원** 전작권 환수 연기 관련해서 용산기지 연합사, 일부 미군 잔류도 합의했습니다. 현재 여건에서 잘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사실 대체로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이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전술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길정우 의원** 한강 이북에 미군이 잔류할 경우에 자동 개입 또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의 불모가 되는 상황 이것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가는 길에 전용기 안에서 수행기자한테 발언한 비밀스런 내용입니다.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게다가 미사일 기술까지 보유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을 아무리 확장하고 보강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길정우 의원** 남북한 간의 소위 말하는 비대칭적인 군사력의 구조 탓입니다. 결국 미국의 핵우산에 우리 국민의 안보를 맡겨야 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안보현실입니다. 장관 생각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핵무기에 있어서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길정우 의원** 그래서 전작권 환수는 2020년대 중반이 아니라 통일의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무기 연기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논리에 잘못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서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협의를 진행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길정우 의원** 전 미 국방장관을 지냈던 레온 파네타의 회고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0년 중앙정보국장, 2011년 10월 국방장관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그래서 한국 군당국과의 대화속에서 북한이 남침을 하면 미군사령관이 한국과 미국의 모든 병력에 대해서 명령권을 갖고 필요할 경우 핵무기도 사용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은 남북한 간의 대립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적인 분단에서 방도를 찾는 것입니다. 이 잠정적인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은 억제 그리고 유사시 승리를 위해서 군에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것이고 군사 외적인 영역에서는 또 다른 분야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정우 의원** 들어가시지요.

다음 군사 외적인 문제 통일부장관께 물겠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3년 사이에 과거 부시 행정부,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관리들이 잇따라서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반도, 북한 관련 대목만 뽑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느낌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미국의 대북정책 일관성 결여되어 있다. 정권이나 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달라진다. 미국의 국내 정치와 선거가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미 정부 안에도 정책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만만치 않다.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터지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순식간에 사그라든다. 하지만 남북한 간의 어떤 대화나 협상이 열리면 미국은 한반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 고위관리들을 대상으로 열띤 취재에 들어간다. 제가 간추린 요약입니다.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류길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93년 북한 핵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북한과

미국 간에 많은 교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위 북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던 시기가 한 20여 년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 특히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그 90년대에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견지해 왔던 그러한 입장이 북한과 미국 간에 많은 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좀 조율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러한 견해들도 또 대두가 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민족 간에 풀어야 될 문제와 또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균형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길정우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장래는 결국 남북한 직접 당사자들의 문제다, 따라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리고 주변국들이 흔쾌히 반기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남북한이 직접 만나 대화로 풀어 가야 한다, 이런 노력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분단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한반도 문제는 역시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는 오랫동안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 뻔했다가 북한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들도 장기간의 남북 관계, 70여 년을 저희가 되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아주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좀 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의 관계를 풀기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또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야 될 노력들도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정우 의원 통일준비위원회 만든 취지, 또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분명하게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통일준비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통일 문제의 중요성만큼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그런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금년 초에 통일대박이라고 하는 통일 담론을 말씀하시면서 말하자면 범사회적으로,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통일 청사진들을 비롯해서 통일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더 함께 협업을 해서 고민을 해 보자, 논의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정부는 그러한 통일준비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문기구들에서 나온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통일정책을 실천을 하는, 시행을 하는, 이행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정우 의원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상 더 이상 통일로 가는 길에서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견지해 온 공식적인 정책기조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충실한 대북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도 합치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스위스는 영구중립국입니다. 이 나라의 취리히에서 발간되는 노이에 취르히 차이퉁(Neue Zürcher Zeitung), NZZ라고 하는 수준 높은 일간지가 있습니다. 국제뉴스 보도 부문에서 매년 세계 10대 유력지로 꼽히는 신문입니다. 이 신문에는 사실이 없습니다. 1면부터 국제뉴스로 채워집니다.

수년 전에 이 신문사를 방문해서 편집방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이 명쾌했습니다.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깥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어야 한다. 신문의 국제뉴스 보도는 국가 생존의 중요한 교육 수단이다. 우리 언론들도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처지, 스위스와 무엇이 다르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상시적인 군사위협에 처

해 있는 대한민국은 광복 70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고 우리 역량의 한계에 대한 주제파악입니다. 자주 국방력을 갖추려는 온 국민의 의지, 모두가 의연하게 동참하는 노력 그리고 정부의 치열한 생존외교가 절실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길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갑 출신 윤후덕 의원입니다.

저는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야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육군병장 출신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오후 제 고향 파주 그리고 연천지역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였습니다. 북으로 넘어간 풍선을 격추하려고 북한군이 고사총을 사격하였고 수발의 낙탄이 우리 쪽에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측의 경고사격, 북한의 대응사격 그리고 우리 측의 조준사격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별 피해가 없어서 교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10월 25일 임진각에서는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파주시민들의 애절한 몸부림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풍선을 띄우는 장소인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파주시 주민들의 안전·생존권 위협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 그리고 남북관계의 악화를 중심에 놓고 이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까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

는 요청을 한 바 있고, 다만 법률적인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는 불가능합니다만 국민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충돌의 우려 등 다른, 있을 때는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후덕 의원** 역시 바라만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하게 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됩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 우리 군의 1군단, 5군단, 6군단이 A급 즉각대응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K-9 자주포가 발사 대기를 하고……

화면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대구 전투비행장에서는 1대에 1000억 원이 넘는 F-15 전투기가 북의 장사정포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출격 대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장사정포를 궤도에서 끌어내서 발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풍선을 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뭐, 남북 간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윤후덕 의원** 참으로 위기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주 긴장을 돋우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윤후덕 의원** 맥이 서늘이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윤후덕 의원** 그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우리 파주시민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 국민들이 일부 불안해하는 점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 적절한 조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위해요인이 생길 경우에는 경찰이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윤후덕 의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25일 파주에서 살포하려던 한 전단

의 내용입니다. 총리님 저것 보세요.

‘전자개표기 사기범 가짜 대통령 노무현과 원조 반역범 김대중이 그것들의 상전 김정일에게 충성하느라 갖다 바친 수백억 달러의 돈과 수천만t의 쌀, 옥수수, 밀가루가 모두 어디로 가 버린 것입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총리님, 그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한 쌀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약 270만t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예, 한 250만t에서 270만t 정도 되고 차관의 형식을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 전단에서는 수천만t이라고 그랬습니다. 허위사실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아니, 과장도 두세 배 됐으면 과장이라고 하지만 20배, 30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윤후덕 의원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입니까, 허위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전단을 꼼꼼히 살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기범 가짜 대통령 노무현, 원조 반역범 김대중’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두 분의 대통령께서 이런 모욕을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약간 모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렇지요?

총리님, 대북전단 빼라 보신 적 있으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못 봤습니다.

○윤후덕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끝나고 드릴게요. 꼭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총리실 그리고 유관부처인 통일부에 이 전단들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허위사실이 적시됐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

니다.

○윤후덕 의원 아니, 검토만 하면 됩니까? 조치를 취하실 그 답변을 국회에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내용을 봐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후덕 의원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 배포단체에 대해서 총리실과 안행부에서 예산지원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몇 년 동안?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 새 정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지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건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것은 잘못 오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후덕 의원 대북전단 이것이 총리실과 안행부에서 자금이 지원되었다면 그동안 정부에서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요. 과거에 한 번 한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새 정부에서 그런 단체에 한 일도 없고 또 우리가 지원한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일도 없습니다.

○윤후덕 의원 정부의 예산이, 국민의 혈세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사업을 보고 지원을 하지 단체를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만 주로 국민통합이나 소통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예, 저도 총리실에 총리님 모시고 비서실장 할 때 그런 기준으로 지원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또 그리고 오전에 총리께서 존경하는 우리 당의 심재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띄운 풍선을 저지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조치한다' 그런 답변 하셨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경찰에서 그런 취지에서 제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조금 전 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국민의 안전이라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후덕 의원 예.

국민의 안전이 뭐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현재 약간의 갈등과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갔을 때 그리고 또 생존권에 위해와 위협이 가해졌을 때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의견은 어떠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윤후덕 의원 와 동시에 생존권의 문제도 똑같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향 파주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들이 귀가를 당하고 또 관광객들이 철수를 하고 음식점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그리고 또 수많은 농민들이, 상인들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긴장 조성 때문에 생업에, 생존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국민의 안전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정부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현지 상황은 경찰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의원 그 말씀은 파주에서, 연천에서 사람이라도 한 명 죽어야지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사전 예방적 차원의 노력도 지금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윤후덕 의원 정부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총리님의 답변, 동어반복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향 파주시의 시의회에서 지난주에 여야간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성명서 채택과 결의문 채택 노력이 있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다급합니다. 국민이 다급한데 국회

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대북전단 중지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호소드립니다. 오늘 이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연명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부디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번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 연기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국방은 박정희 대통령님 때서부터의 염원이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윤후덕 의원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작전권 전환은.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윤후덕 의원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3년에서 95년에 전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1996년 이후에 협의한다'라고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윤후덕 의원 그렇게 해서 추진된 일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들께서 다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무기 연기를 한 거지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파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것은 하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안전을 먼저 도모하고, 그 조건을 갖추고 난 뒤에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도 그 조건을 갖추 때까지, 지금 2020년대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까지 연기하자는 그런 취지이고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환수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갖고 계신 거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것은 조건이 갖춰지면 할 것입니다.

○윤후덕 의원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를 결정한 한미 국방장관의 회담이 10월 23일에 있었습니

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후인 10월 29일 바로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 저기 앉아 계셨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윤후덕 의원 저는 저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왜 전작권 전환을 무기 연기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하셨어야 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때 시정연설에는 모든 사안을 다 담을 수는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작권이 우리에게 환수되면 북의 도발 시 미군이 즉각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작권이 전환된다는 것은 한국 방위에 있어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주도·지원 관계가 바뀐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평상시의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은 전시에만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전력에 어떤 차이가 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력은 기본적으로 배치된 전력 또는 증원되는 전력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연합방위력에 큰 차이는 없는 겁니까. 똑같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소위 주도·지원 관계에 따라서 미국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우리 정부가 전작권 환수 의지는 분명합니다. 전작권을 환수했을 때 우리 군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의미는 몇 가지나 되고,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작권 전환을 하면 주도·지원의 관계가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반도 전구작전에 있어서의 작전 기획, 연습, 이런 평상시 교육훈련은 별도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이 증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우리 군이 강군이 될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강군은 지금도 강군을 지향하고 있고, 그러한 책임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전시작전 지휘를 각오하고 준비한 것 그 자체가 강군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도 강군 요소 중에 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2015년까지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여 핵무기 실전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추측되고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그리고 향후 북한의 핵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핵능력은 여러 번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플루토늄을 약 40kg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상당 수준 발전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또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도 추진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한미가 맞춤형 억제 전략의 개념과 또 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 작전 이런 개념과 방향에 따라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 말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그대로 놔두고 개발됐을 때 그렇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군사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윤후덕 의원 아니, 지금 장관님께서 북한 핵 문제, 핵 개발을 그대로 방치하고 미국과 함께 그 이후에 억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답변드린 것은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답변을 드린 것이고 정부에서는 군사 외적인 외교·정치·경제 등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을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 또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윤후덕 의원** 3차 핵실험을 하고 얼마나 지났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3차 핵실험은 2013년 2월 12일 날 했으니까 1년 6, 7개월 됐습니다.

○**윤후덕 의원** 통상 핵실험 후 핵을 소형화·경량화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는 핵실험 이후에 2~7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 통계는 60년대, 70년대 통계인데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전제를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현재 얼마나 걸리는지는 핵무기 개발하는 나라들이 최근 들어서는 별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런 장관님의 답변에 근거한다면 북한이 소형화·경량화에 거의 근접했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윤후덕 의원** 이제 2015년, 2016년경에는 제4차 핵실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준비 상태 또 징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만간 있으리라고 하는 징후나 첩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후덕 의원** 우려가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실전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치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앞서도 어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또 각국 연구기관에서 핵무기가 무기화되었을 때 우려를, 경고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우선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북한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만약입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진다면 남한의 핵과 북한의 핵이 공포의 균형 상태를 이루어 내면서 우리의 열세적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상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 시 우리도 핵 보유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좀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주장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을 한 이래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거나 반입하거나 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윤후덕 의원** 정부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글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미가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위협이 현실화됐을 때 대응하기 위한 이행체제를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발전시키고 연습하고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윤후덕 의원** 아직 핵무기가 전술적 단계까지는 못 갔는데 그것을 저지하는 게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국정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윤후덕 의원** 다각적인 노력 중에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부가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나오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북한의 진정성만 따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과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가지고 기 싸움만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시간은 촉박한데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나마 협상의 돌파구인 고위급 회담을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대북전단 살포,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됩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남북관계 상황에서 볼 때는 도움이 안 되지요. 도움이 안 되지만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72년 7·4 남북공동성명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 간에 비방·중상을 하지 말자, 상대방을 존중하자, 인정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합의문에도 담겨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거 역사를 다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윤후덕 의원** 최근처럼 풍선 띄우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군사적 위기상황까지 간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리고 풍선을 격추하려고 고사총을 쏘서 그 낙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도 처음이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것 때문에 경고사격을 하고 대응사격을 하고 교전사격을 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답변하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들어가십시오.

지금 우리는 실익도 없고 파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킬 정도로 한가한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숨통을 열어 줄 수도 있는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키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에 평화통일을 선언하였듯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획기적인 대북선언과 협상 돌입에 절실하고 또 절박한 선언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윤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 출신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 존경하옵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당진 출신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력이나 국가적 위상에 있어서 100년 전 우리 조선과는 무척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100년 전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평가도 가능하겠습니까.

○**김동완 의원**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서쪽에서는 청일전쟁이 있었고, 동쪽에서는 러일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내부에서는 대원군과와 민비파가 대립해서 지루한 치킨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조선은 10여 년 후에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했고 일제 36년의 식민지와 6·25 전쟁이라는 뼈아픈 역사도 겪었습니다.

100여 년이 흐른 오늘날 서쪽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와 항공식별구역을 두고 일전도 불사할 자세이고, 동쪽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이 쿠릴열도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긴장감은 더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내부에서는 남북 간 대립과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는 그 당시보다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지금 많이 학습을 했고 또 현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사정이 다르겠지만 앞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완 의원** 지난번에 유럽에 갔을 때 유럽인들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럽 사람들

이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확고한 역사적 교훈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고 그것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럽인들은 그러한 전쟁을 막으려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동완 의원 그렇지만 동북아는 어떻게 하고 생각해 보면 동북아 지역에는 전쟁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발화점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민족주의 의식이 팽배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 유럽이 민족주의 의식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팽배해지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지 않습니까?

결국 민족적 자존심을 해친다면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것은 아마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발화점은 동북아 지역에 아주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센카쿠 열도라고 얘기도 하고 중국어로는 댜오위다오 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쿠릴 열도, 독도, 우리 남북 간의 휴전선 등 얼마든지 저는 발화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국가 간 충돌은 국지전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 지역에 팽배해 있는 민족주의에 의하여 국제전쟁으로 확산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패러독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동완 의원 이러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도 한반도의 통일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이 그랬듯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북한에 급격한 정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이때 우리는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확고한 안보의지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완 의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과 우리 국무위원님들이 이러한 현상이 재발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공감합니다.

○김동완 의원 우리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어떻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국들에게 우리 미래의 모습을 보여 주고 국제적 동의와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총리님, 최근 독일통일의 막전막후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완 의원 제가 그것을 봤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과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공개적으로 얘기는 않지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그걸 좀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통일의 과정에 가는 것에 동북아에도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0여 년 전의 우리 역사적 교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몇 가지,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한 초당적 진정성을 갖고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서 세월호법과 같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루마니아 회의를 갔었습니다. 몇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인권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남의 나라 국회의원들한테 북한인권법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할 때 참 몇몇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자유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엔이 지난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유엔에서 결의안 채택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또 대통령께서도 유엔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셨고 최근 북한의 태도도 많이 변했습니다.

총리님, 최근 북한의 유엔에 대한 태도가 왜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김동완 의원** 예, 그것만 빼 주면 방북해도 좋다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북한이 인권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대로 압박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여야가 국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두 법안을 비교해 보면 기본권으로서의 인권과 인도적 지원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북한 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타협안을 마련해서 세월호와 같이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국제법 준종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든 교류 협력은 주고받는 형식을 준수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철저히 맞게 맞교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고 유엔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빨리 이 법 제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북한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완 의원** 아까 말씀드린 영화에 보면 콜총리께서 가서서 동독 총리를 만날 때 ‘돈으로

절대 동독을 사지 않겠다. 우리는 동독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독이 교류 협력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맞교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저는 남북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국제법 틀 속에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5·24 조치는 일방적으로, 남북 협력에 지금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축적인 반응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시그널을 저는 북한에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철저히 변화하고 국제법 준수의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 남북한이 통일로 가기 위해서 국제법적인 협상 테이블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5·24 문제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듯이 원인 제공을 한 북에서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납득되는 그런 해소책이 나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진전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완 의원** 그래서 맞교환할 때, 우리 국군포로 아무도 못 데려왔잖아요. 1명이라도 데려오는 그런 맞교환 방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남북한이 국제법 틀 속에서 통일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공감합니다.

○**김동완 의원** 총리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요새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제가 외교부에서 나오는 성명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신축적 외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용어를 ‘신축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어떤 문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외교를 할 타이밍에 있어서 때로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또 유연성을 발휘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

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유연성 있는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틈새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은 점차로 우리 한중 관계가 너무 가까이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또 한국이 미군을 뚫으로써 미사일이 중국 국경에 가깝게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또 한일 관계와 역사 문제가 있자 북한과 탈북자 관계, 실종자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서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형국 속에서 우리가 그런 유연성 있는 외교정책을 펼 수 있는 틈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로 주변 안보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만 오히려 외교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상황도 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외교력도 많이 신장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가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가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오바마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또 중국도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처지이고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미국, 중국 간에 공감대가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희의 전략적 가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저는 100년 전의 역사 교훈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때하고는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 국제 인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있지만 그래도 큰 틀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왜 우리가 전쟁을 겪어야 됐느냐, 일본이 산업혁명에 성공하면서 동북아 판을 다시 짜야 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100년 후인 지금은 중국이 G2로 성장을 하면서 동북아 틀을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관님과 같이 그렇게 낙관적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것이 일각에서 저희 국력의 성장, 외교력의 신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작년 말에 방공식별구역을 60년 만에 재설정했던 데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도 이제는 지역질서, 또 세계질서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전략적인 지위와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국제사회가 저희한테 바라고 있는 기대치입니다.

○**김동완 의원** 그런데 웬지 모르게 우리가 주변국에서 신뢰기반이 충분하지 못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뢰를 얻으면서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통일이, 한반도 통일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그런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과거에 통일문제를 중국 지도자 앞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터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터부가 아니고 언제든지 중국 지도자, 또 외상 간에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통일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평화통일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지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많은 나라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일에 대한 환경은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런데 지난주에 조선일보에 중국의 외교협회 회장이신가요, 그분이 쓴 것을 보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 그러나 좀 더 우호적인, 중국에 우호적인 그런 통일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외면적으로 외교적으로 나오는 용어하고 속의 판단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외교를 하면서 장관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런 식으로 항상 저희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외교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독일통

일의 막전막후를 보면 영국과 프랑스도 독일통일을 지지한다고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까 대처와 미테랑은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국제질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가 통일한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동완 의원 그럴 때 우리들의 어떤 미래상을 가지고 주변국한테 동의를 구하고 일단 우리 국민에 의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주변국한테 신뢰를 받고, 동의를 구하고 신뢰를 받아야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을 믿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독일의 경우는 빌리 브란트가 50년 전에 바르샤바에 가서 무릎을 꿇고 모스크바에 그렇게 하고도,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분명한 의사가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테랑과 대처는 '저것 통일시켜 놓으면 또 전쟁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통일한국 미래상을 정립해서 주변국한테 신뢰를 얻어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핵화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영세중립국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중립 한다고 해서 외국에서 중립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위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세중립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고종 황제께서도 그 당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國制) 조항에 영세중립국을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대한제국은 영세중립국을 지킬 만한 자위역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자위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비핵화나 자위권 강화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영세중립국 선언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특이한……

○김동완 의원 많은 논의가 있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특이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주변국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될 문제이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제안……

○김동완 의원 연구는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래서 저는 그 자위권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군의 군사적 역량이 있을 것이고 민방위의 민간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총리님, 민방위 시설이나 민방위 훈련에 가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저는 민방위 훈련……

○김동완 의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길정우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스위스 사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방위 역량을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 국가의 방위 역량을 잘 키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총리님께서 민방위에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공감합니다.

○김동완 의원 총리님 들어가시고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로 지금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의 책무입니다.

○김동완 의원 자위권 강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군의 군사력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국군의 군사력을 참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동완 의원 사실 그동안 군은 개혁하겠다고 많은 것을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국민에게 신뢰할 만큼의 개혁의 모습은 못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를 포함한 우리 군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완 의원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군의 요즘에 나오고 있는 문제점을 인사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육군에 특정 출신 장군들이 지금 너무 많지 않

습니까? 지금 출신별로 장군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께서 육사가 많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장군 비율 보면 한 7 대 3 정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김동완 의원** 아마 미군도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군 부조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미군도 이 문제, 인사 개혁을 했는데 지금은 ROTC 등 비육사 출신들이 70%, 80% 된다고 그러니까.

장관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께서 정말 능력에 따라서……

지금은 영관급 장교의 7, 80%가 비육사 출신이고 그런데 장군은 육사 출신이 7, 80%라면 어떤 영관장교가 정말 내 생명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흔히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워낙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사이즈가 큼니다마는 사관학교와 또 ROTC, OCS 이런 출신들이 갖는 중견 장교들의 비중이 커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군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율이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우리 군은 그동안에 초급 장교는 많은 비율이 있었는데 중간층으로 가면서 그것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ROTC라든지 3사라든지 또 학사 장교, 이런 영관장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위나 소령, 중령 이런 데서는 출신 구분 없이 지금 개방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상위 계급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완 의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군의 달라진 모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군피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장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주변국의 신뢰 속에 통일로 갈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구분이 없이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여야가 다른 의견을 대내외에 적나라하게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교·안보에 대한 여야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야 협의체를 통해 우리나라 외교·안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외교·안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에 모두 준비하려는 소나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서 채워 가는 샘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동완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시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리님께서서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여쭙 보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제가 군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을지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법무관들과 토론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저는 상당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법적 처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리께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해서 우리 국군과 미군 연합군이 북한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을 때 북한 지역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헌법에 규정한, 북한은

한반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지위 변화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홍철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복지역으로 간주하고 우리 정부의 통치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복잡한 국제정치적, 국제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국군이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다면 북한 지역에 대한 법적지위 결정권을 우리 국군이 가질 수 있게 되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민홍철 의원** 북한에 대한 군사적 관할권 행사를 우리 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우리 헌법에 따라서 북한 지역을 수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이지요.

그러나 미군에게 전작권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미군사령관에게 있겠지요? 군사적인 관할권을 말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홍철 의원** 예?

○**국무총리 정홍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홍철 의원**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작전지휘권은 작전지휘에 대한 구성에 관한 문제이고 군사통수권이라든지 이것은 엄연히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있고 우리 주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 예상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홍철 의원** 총리의 말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법적으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 문제는 가상을 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논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

도 우리 통수권이나 그런 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홍철 의원** 전작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법적 처리를 국제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헌법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영토로 수복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요? 알고 계십니까? 정치외교적으로도 현재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홍철 의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시에도 북한에 급변 상태가 생겼을 때 작게 5029 적용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꼭 공개적으로 이런 특정 상황을 가상을 해서 논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래서 우리의 소원처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하고 싶으면 전작권 환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져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작권 환수 재연기 결정은 우리의 통일정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수차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우리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무시하고 그걸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빨리 그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홍철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국방위 국정감사 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민홍철 의원** 장관님, 그러면 국가주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작권 문제를 군사주권 또는 자주국방의 개념과 관련해서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군사주권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자주국방과 군사주권이라는 맥락에서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는데 대개 한 나라가 군사주권을 갖는다, 자주국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국방정책의 결정권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력 건설에 관한 결정권입니다. 세 번째는 군사력 운용에 관한 결정권입니다.

민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통수지침을 받들어서 전혀 문제없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사력 운용에 관해서는 그것이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있는데, 평시는 우리가 평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전시만 작전통제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작전통제라고 하는 개념은 지휘, 작전지휘, 작전통제, 전술통제라고 하는 그러한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전투 편성을 하고 작전을 하는 하이어라키(hierarchy) 속에서 아주 제한된 의미의 그런 개념입니다. 또 그것도 연합사령관은 소위 양국의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으로 구성되는 국가 및 군사통수기구라고 하는 그 체계 내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군사주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총리께서 답변을 올렸습니까는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우리의 문제도 전혀 우리 군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또 대통령께서 통수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없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홍철 의원** 장관님, 역사적으로 195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했을 때 한국 정부나 한국군은 북한의 통치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10월 30일 당시 이승

만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민홍철 의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국가의 주권을 물론 장관님 말씀대로 군사주권·경제주권·외교주권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군사주권이 없으면 경제나 외교 필요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까는 지금 예로 드신 그 부분은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발발하고 서울이 3일 만에 피탈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맥아더 원수에게 한국군의 지휘에 관한 권한을 이양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영어로 밀리터리 어소리티(military authority)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지휘나 작전지휘, 작전통제, 전술통제라고 하는 그런 정교한 개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시에 그런 포괄적인 권한을 이양하고 또 맥아더 원수는 이양받은 것으로 해서 북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없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민홍철 의원** 그 역사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시에 우리 군대를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운용하거나 작전지휘할 수 없고 다른 나라의 통제를 받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도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전작권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환수 연기가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도 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무슨 군사주권이라든지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고, 다만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소위 지휘관계를 한미 간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안보와 국방에 이익이 되는가 하는 전략적 선

택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아까 제가 총리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법무관 생활을 하면서 미군 법무관들과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장관님, 다음 혼련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미군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조건 충족 여부의 판단 주체는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작권은 한미 공동이 행사하는 것이고 한미 공동으로 합의한 것이고 앞으로 그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년도 SCM까지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서 이행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1일을 목표로 했던 '전략동맹 2015'라고 하는 이행체제의 문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행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 역시 한미 공동으로 합의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행조건을 따지는 것도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민홍철 의원** 한미 양국이 일치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민홍철 의원** 킬체인, KAMD 등 우리 국군의 능력을 갖추는 데 들어가는 게 약 60조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인데요, 어떻게 마련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킬체인과 KAMD는 60조까지는 아니고요.

○**민홍철 의원** 우리 국군의, 전작권 환수 조건에 맞는 우리 국군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걸 답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17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리고 북한도 군비를 증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킬체인이나 KAMD 체계, 우리 국군의 능력을 회피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계속 갖춰갈 건데 우리는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조건의 충족, 점점 멀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수조건 충족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전력의 목표치는 첫 번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핵

심능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면전이나 전면전 초기 또 국지도발 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필수능력 이 두 가지를 구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조 원을 기초로 해서 첫 번째 경우는 지금까지 상당부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예산소요는 전작권 전환과 연계되는 소요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보장하는 소요이고, 그것은 대개 2020년대 중반에 그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조건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너무 조건들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충족의 시기라든지 정도가 여러 가지 좀 상정되는 게 불명확하다, 그래서 사실상 전작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 또는 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무기한 연기, 포기란 말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2020년대 중반까지는 무리 없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장관님, 군 기강이 무너지면 군대가 무너집니다. 지금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면회제도 혁신·확대, 수신용 휴대전화 보급 그다음에 병장계급 폐지 등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 혁신위에서 내놓은 것도 있고 다른 육군이나 이런 데서 검토한 것이 이렇게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런데 평일 면회를 확대하고 GOP 면회를 허용한다고 해 가지고 병영 내 사고가 줄어들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은 그것이 병영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우선 조치되고,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그러한 과제들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조치할 과제를 몇 개 식별해서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혁신위에서 한 12월 초까지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리고 아무나 병장 못 다는 계급체계를 만든다 또 수신전용 휴대전화를 지급한다 해서 병영 내 폭력이 근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은 정말 철학적 고민과

인간적인 연구가 없는 그야말로 면피성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대책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은 대책의 완성품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아주 초기적으로, 초기에 우선적으로 조치할 사항 몇 개를 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군대의 기본을 흔들거나 군대의 본분을 망각하거나 하는 그러한 면피성이라든지 보여 주기라든지 또는 의례적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것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홍철 의원** 병영 악성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군이 병사들을 인간으로서 대우하기보다는 군의 전투력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병영 관리를 폐쇄적으로 운영해서 사회 간섭을 너무나 거부해 왔다, 그리고 군대라는 특수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군대 구성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너무나 도외시해 왔다, 그래서 심지어는 ‘군대는 법이 적용될 수 없다. 군대는 인권이 소용없다. 군대에 무슨 법이 있느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민 의원님께서 군법무관으로 하시면서 군법 및 군 기강, 질서유지를 위해서 참 남다른 고민과 또 실천을 해 오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이 과거의, 아주 오래된 과거에 우리 군에 있었고 지금도 그 유풍이 남아 있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군의 많은 간부들이 대한민국 군대는 대한민국 사회의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법규가 준수되고 인권이 존중되고 인격체로서 계급 고하에 관계없이 대우받고 복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지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또한 그 사건·사고의 발생 여부가 보면 부대 관리의 성패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진급이라든지 보직 등 인사관리를 위해서 지휘관들이 여러 가지 무리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이러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사고는 날 수 있는 것인데 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으로서의 임무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여부에 따라서 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또 군에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조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병영문화혁신위에서도 그러한 권고안을 우리에게 낼 것입니다.

○**민홍철 의원**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피아에 의한 방산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취업 윤리규정이라든지 감점제도 등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여러 가지 아주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병영의 적폐 해소, 군내 장병 인권 보호,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군사법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장관님, 28사단 사건은 군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선 28사단 사건은 군의 각 병사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또 인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요구한 것이라고 보고 모든 장병들이 법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대우받고 또 처리되고 하는 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례라고 봅니다.

○**민홍철 의원** 예, 저도 장관님 말씀에 덧붙여서 군사법제도를 개선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8사단 윤일병 사건은 군사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려 준 종합세트였다, 군이 인권과 사법 정의를 위해서 군사법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지휘권 보호와 부대 이익만을 위해서 활용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수사 절차는 물론 사건 자체를 은폐·축소·조작하는 직무상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군인권단체의 폭로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드러난 후에 사건 자체를 3군사령부로 이송을 합니다. 3군사령부가 어떻습니까? 28사단 상급 부대 아닙니까? 3군사령관도 사건의 책임 당사자로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3군사령부는 충분히……

○**민홍철 의원** 그렇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사단 사건을 군이 은폐·축소·조작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공소장이나 이런 데에 하나도 있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게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적시해 국민에게 이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소상히 보고를 못 드렸고 그것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인권단체의 어떤 분이 말씀을 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군이 축소 또는 은폐 또는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것인데 공소장이나 조사 결과에는 뭐 하나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민홍철 의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휘 관계가 간접적으로 차단된 국방부로 사건을 이송해서 국방부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나 검찰부에서 재판이나 수사를 진행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군사법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육군 법무감과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재직할 경험에서 군사법원 제도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군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제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지난 2005년도에, 10년 전입니다, 그때 육군에서 군사법제도 개선 내용입니다.

현재 80여 개의 보통군사법원이 각급 부대 소속과 각급 지휘관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휘관으로부터 분리해서 지역군사법원으로 한 5개 정도 권역으로 나눠서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 총장으로부터 국방부장관으로 이관해야 된다, 그리고 관할관의 형량 감경권과 재판 확인권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군검찰을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독립시켜서 국방부 또는 권역별로 설치를 하자 이

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반 장교가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제도, 정말 손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또 수사기관을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 검찰단장을 장군으로 보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사법원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 대전제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존치하도록 허용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군의 기강 확립과 군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 또 장병의 인권 보장,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을 해도 이와 같은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경권이라든지 심판관제도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는 법사위에 10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의견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최적의 개선안이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고등검찰단장의 장군으로의 계급 상향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홍철 의원**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민홍철 의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이 정도 수준보다도 더 나아가서 아예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하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방부에서는 유념하면서 군사법원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군 고위 장성들은 군사법제도 개선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게 많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

지금부터 한 두 달 전에 제가 각 군 총장들을

모아서 한 번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문제가 뭐고 어떤 것이 문제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잘못 와전돼서 뭘 거기서 안 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렇다면 다행스럽습니다.

10년 전에는 지휘관들이 주로 사법권을 당연히 지휘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논리를 펴고 있었어요. 그들의 권한을 뺏길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앞으로 군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이 어느 정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는 계급이 일을 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군대는 계급이 일을 한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계급이 반드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계급이 상당히 의미를 많이 갖는다, 이렇게 말씀……

○**민홍철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방부 검찰단장의 장군 직제와 이 말씀과 연관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현재 조사본부장은 현병 소장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의원**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장을 그와 형평성에 맞게 계급을 조정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이해했습니다.

○**민홍철 의원**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민홍철 의원** 국방옴부즈맨 제도, 현재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국민들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옴부즈맨제도는 지금 방사청에도 있고 또 국방부에 관해서는 권익위에 관련 옴부즈맨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옴부즈맨제도라고 하는 것을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다, 저희들이 그걸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아무튼 지금이야말로 군사법 체

계 개선의 혼히들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군사법 체계는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결국 일반 사법 체계로 가게 되면 군으로서의 군복을 입은 채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일반법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제2의 창군의 각오로 군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제가 지금까지 접해 본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군사법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분들 모두 다 군이 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기본을 다 지키고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어떤 부분적인 그러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도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홍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국군은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더욱 강하게 육성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군에 보낸 우리 아들딸들이 가혹행위와 폭력을 당하고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희생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민홍철 의원님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해운대 기장을 출신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河泰慶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 기장군 출신 국회의원 새누리당 하태경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 북한의 고사총탄이 떨어졌던 경기도 연천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중면사무소 대피소 옆에 총탄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대북 뼈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은 국익만을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 주민들의 생활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핵심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외교안보 정책, 대북통일 정책까지도 점점 더 민주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하나하나의 외교안보 정책이 주민들의 생활에 어

면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 외교안보 정책도 더욱더 섬세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동안 보여 왔던 대북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상당히 거칠고 요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총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나와 주십시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소형 핵무기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한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총리께서도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준의 소형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완벽한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북한이 그 핵을 사용한다면, 북한이 그 핵을 영원히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議員 대비해야 되겠지요.

북한 주변에 한·미·중·러·일 5개 국가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어느 나라에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당연히 우리나라겠지요.

○河泰慶 議員 그렇지요.

총리, 우리나라 원전이 많이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河泰慶 議員 원전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립돼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河泰慶 議員 원전이 터져서 주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과 북이 핵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단순 어느 쪽이라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개, 두 문제 다 대비를 해야 됩

니다.

○河泰慶 議員 그렇지요.

북의 핵공격에 대비해서 핵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핵이 터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정부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총리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대비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 측의 공식 답변은 핵이 떨어질 것을 전제한 대비책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 정책밖에 없다는 게 공식 답변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뭐 딱 핵이 여기에 떨어졌을 때에 대비한 건 아니지만 계속 우리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훈련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議員 그 민방위훈련은 재래식 전쟁에 대비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상정을 해서 한 훈련들도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총리, 국민을 호도하시면 안 되지요. 정부가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대한민국 영토에 핵이 떨어졌을 때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서 위증하시면 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것이 지금 핵이 폭발했을 때 그것만을 상정해서……

○河泰慶 議員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전에도 그렇고 계속 질문이 나왔는데 북한이 핵을 쏘았을 때, 탄도미사일에 장착해서 그걸 완벽히 방어할 수 없다는 게 오전 내내 확인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완벽히 방어를 못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완벽하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이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河泰慶 議員 총리님, 대정부 답변을 오래해서서 그런지 완전 오늘 철환까지 답변하시네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솔직하게 답변을 안 하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문제에 시간을 끌어야 되겠습니까? 제출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사전에 선제 타격하고 요격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만 있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지, 대피시설, 주민 대피요령,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는 총리님 인격을 아주 좋게 생각했는데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도가 일부 나왔는데요, 국내 원전이 사이버 테러에 취약하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河泰慶 議員 최근 산업부의 한빛·고리 원전 감사 결과 19개의 아이디어와 비밀번호, 원전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비밀번호가 외부 용역 직원들에게 유출되었습니다. 또 외부 용역 직원의 USB가 원전으로 무단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전표준설계도라는 대외비 문건이 외부 용역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농협이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당했습니다. 그 방법이 아이디어와 비밀번호가 유출되고 USB가 무단으로 반입된 결과였습니다.

모든 원전에 대해서 보안 점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앞으로 철저히 허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議員 산자부 감사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실시한 2013년·14년, 산자부보다 전에 한 겁니다, 정보 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한수원이 백점 받았습니다. 만점 받았습니다. 오류가 없다는 거지요.

국정원의 보안실태 점검이 엉망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허점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河泰慶 議員 국정원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조작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셔서 책임자를 가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의 방사능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운반 중인 핵물질에 대한 테러, 오염폭탄에 의한 테러 사항만 명기되어 있고 원전 사이버테러는 빠져 있습니다. 원전 사

이버테러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사이버테러에 충분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河泰慶 議員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처럼 대한민국 원전에도 그런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정홍원 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그런 데 대비하기 위함이고 앞으로……

○河泰慶 議員 현재 방사능 재난 책임부처가 어디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산업부로 알고 있고……

○河泰慶 議員 원자력안전위원회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河泰慶 議員 이번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 원자로 내부에 담수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담수를 주입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담수를……

○河泰慶 議員 주입한 게, 물을 쏟아서 넣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河泰慶 議員 누가 그랬는지 압니까? 목숨을 걸고 그랬던 사람들이?

○국무총리 정홍원 요원들이 들어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속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河泰慶 議員 군대입니다. 자위대입니다. 결국 최악의 사고가 났을 때는 군이 목숨을 걸고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 동원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미국·일본 간에 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河泰慶 議員 미국 바지선이 함께 담수를 주입했습니다.

지금 한미군사훈련 내용 중에 원전 방사능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훈련내용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없습니다. 이 부분 일본 후쿠시마 사례를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河泰慶 議員 프랑스에 원전특공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河泰慶 議員 군이 중심이 되어서 원전 감시활동, 대테러작전, 정보 수집 업무 등 국민들의 원전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원전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전 하나당 40명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프랑스처럼 원전특공대 같은 걸 조직을 해서 국민들의 대원전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우리도 군이 원전 보안이나 경호 등 임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河泰慶 議員 우리 군은 한 100여 명 정도가 전체 원전 담당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河泰慶 議員 그것도 대테러작전만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재난이 났을 때 군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군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오세요.

장관님, 많이 들으셨겠지만 애기봉 등탑 철거 아직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지부대에서 내년 3월까지 철거하도록 김포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서둘러도 되지 않을 일을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억측이나 또 우려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애기봉 등탑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방부의 신뢰가 땅에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포시와 군에 확인해 보니 내년 3월에 애기봉 등탑 철거 문제로 김포시와 군이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방부장관은 등탑 문제에 대한 진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 문제는 하루 이틀 협의한 것이 아니고 김포시하고 김포시가 그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국방부와 김포시가 합의 각서를 맺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 계획에 의하면 내년 3월부터 김포시에서 그곳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생태공원 조성 계획이 있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생태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등탑 철거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그 등탑의 위치에 다른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에 보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해병부대는……

○河泰慶 議員 등탑 철거 사실 사전에 몰랐다고 하신 분이 오늘 답변을 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누가 저에게 공식적으로 '니가 알았니, 몰랐니' 하고 질문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사실이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사단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 이유 말고 등탑 철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또 안전에 상당히……

○河泰慶 議員 그게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河泰慶 議員 오늘 총리님을 비롯해서 계속 사실이 아닌 얘기만 하십니다.

그 안전등급을 몇 등급 받았는지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D등급입니다.

○河泰慶 議員 D등급이 반드시 철거 등급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보고받기로는 D등급을 받았고 관광객들이 계속 하루에 여러 분씩 오시는데 그것이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해서 사단장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河泰慶 議員 D등급이 철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마 사단에서는 D등급을 받고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내년 3월에는 다시 공사를 다른……

○**河泰慶 議員** 아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섬세하게 좀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권 지지자들이 국방부장관님의 그런 발언 하나하나 때문에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D등급은 철거 등급이 아닙니다. 안전등급은 A부터 E등급 있는데 E등급도 철거 안 해도 됩니다. D등급은 보수 보장만 하면 됩니다.

애기봉 등탑이 어떤 탑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국민들한테. 이 자리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애기봉 등탑은 그동안에 그것이 북녘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이런 가치를 12월 25일을 전후한 일정 기간 전해 주는 그러한 의미 있는 탑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렇지요? 애기봉 등탑은 우리 근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일종의 분단시대의 역사문화 유산이자 보물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런데 이런 의미의 등탑이 철거가 아니라 파손되었지요. 파손되었을 때 국방부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한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과드린 적 없습니다.

○**河泰慶 議員**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아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河泰慶 議員** 일본 외교부장관입니까?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

○**河泰慶 議員** 빨리 사과하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애기봉 등탑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의미를 깊게 느끼시고 또 애정을 가져 오셨던 많은 국민들께서 보실 때 그것이 충분한 검토와 또는 사려 깊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철거되므로 해서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그 예하 부대를 충분히 감독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든 점을 말씀드립니다.

○**河泰慶 議員**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현돈 전 대장 관련해서 국방부가 이러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신 전 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 위치를 이탈하고 출타 기간에 품위를 손상시

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품위를 손상시킨 건 없다, 음주를 한 적은 있으나. 품위를 손상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봅니다.

○**河泰慶 議員** 구체적으로 어떻게 품위를 손상시켰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신 장군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일부 언론에서 극단적으로 말하였듯이 술이 만취가 돼서 헌병의 등에 업혀 가고 또는 말싸움을 하고 몸싸움을 하고 이랬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술 마신 건 사실이고 그의 그 행태를 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어느 분이 느껴서 신고를 하고 문제를 삼은 건 사실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제3자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알려지고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된다면 나는 야전군 사령관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명예와 군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전역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역을 한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그 행태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알려진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바로 잡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河泰慶 議員**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객관적인 진상조사는 할 필요 없이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해서 언론에 나면 그건 곧 품위 손상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거를……

○**河泰慶 議員** 아니면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마실 수가 있는데 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여하튼 제3자가, 신고한 사람 눈에는 그것이 매우 적절치 않은, 문제가 많은 행동으로 보고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河泰慶 議員** 제3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음주는 했지만 품위가 손상될 만한 심각한 행위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사 못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분은 처음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몇 차례 확인을 해

서 두 차례씩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河泰慶 議員** 평생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희생한 군인이 한 사람의 신고로 인해서 잘못 이해되고 언론에 뺨뺨기돼서 불명예 퇴직했습니다. 국방부는 제대로 진상조사도 안 하고 언론에 마녀사냥된 사람을 보호해 주지도 못 하고 버렸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는 장관으로서 제가 적절하게 못 한 것이 있다면 저의 불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河泰慶 議員** 아니, 지금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있어서 언론에 시끄럽게 났다, 그거 자체가 품위 손상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방부는 그걸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신 대장 불명예 전역에 대해서 국방부는 하등의 책임도 없다는 거죠?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도 그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그 본인이 그런 것이 사회 문제화 되고 그것이 자기가 그 직책을 수행하는 데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 수용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河泰慶 議員** 그 이후에 정밀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河泰慶 議員**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시끄럽게 나서 사회 문제화가 되면 본인 책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녀사냥 당했는데 마녀사냥 당하면 그 당사자가 마녀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님 논리가?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런 논리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河泰慶 議員** 대한민국 모든 국군이 장관님 답변을 볼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 군인들을 대한민국이 그렇게 서운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빨리 사과하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의원

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모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의 명예가 소중히 보장되어야 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앞으로 장관으로서 그런 점에서 더욱 우리 부하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데 노력을 훨씬 배가하겠습니다.

○**河泰慶 議員**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는데요. 장관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에 충성한 우리 군인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로 마녀사냥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우리 군인들이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의원님 말씀 제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河泰慶 議員**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달 25일 토요일, 시끄럽게 빼라 뿌린 단체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河泰慶 議員** 그 빼라가 북한으로 갔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한두 장이 아니기 때문에.

○**河泰慶 議員** 그날 바람의 방향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불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어도 그 빼라단체의 성격이 어떤지는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빼라 중에 모든 빼라가 참된 빼라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기 빼라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河泰慶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들어서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섬세한 면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아주 거칠고 요란스럽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세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한일 관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미·중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안보 당국이 정확히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제 정세에 의해서 좌충우돌하고 국내 여론에 의해서 우왕좌왕할 때 대한민국 미래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편

안히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 특히 외교·안보팀, 반성하시고 각성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국심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의화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의 그 중요한 말씀을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국민들이 듣지를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 의원(27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영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태	김운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183인)

강기윤 강기정 강석호 강은희
 경대수 권은희 권근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태 김승남
 김영주 김용남 김윤택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중훈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회선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철래 도종환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송영근
 신경림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우상호
 유원식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은혜
 유의동 유일호 유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호중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윤석 이이재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진영 최봉홍
 최원식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지만 홍철호 황진하

○속개 시 재석 의원(83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경대수 권근희 길정우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미희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세연 김영주 김용남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한표
 김희국 남인순 민병주 박광운
 박남춘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혜자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서기호 송광호 신경민
 신성범 심재철 안덕수 안민석
 오제세 우윤근 유대운 유성엽
 유일호 윤영석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원욱 이인영 이장우
 이종진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한성 인재근 장병완 전하진
 전해철 정성호 정진후 정호준
 주승용 진선미 최봉홍 최재천
 홍철호 황주홍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84인)

강기윤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광림 김도읍
 김동완 김민기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을동 김재연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한표
 김현 노철래 류성걸 문희상
 민홍철 박대동 박맹우 박병석
 박윤옥 박혜자 배덕광 백재현
 부좌현 서영교 송영근 신경림
 신정훈 심재권 안규백 안덕수
 안홍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이개호 이노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채익 이철우 이한성
 이현승 임내현 임수경 전정희
 정세균 정의화 진선미 최봉홍

하 태 경 한 기 호 함 진 규 황 영 철
○청가 의원(13인)
 김 용 익 김 우 남 김 현 숙 김 희 정
 류 지 영 서 용 교 유 승 희 은 수 미
 전 순 옥 정 미 경 최 경 환 최 동 익
 황 인 자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형 준
 입 법 차 장 임 병 규
 의 사 국 장 장 대 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정 홍 원
 외 교 부 장 관 윤 병 세
 통 일 부 장 관 류 길 재
 국 방 부 장 관 한 민 구

○출석 정부위원

국 무 조 정 실 장 추 경 호

【보고사항】

○의안 제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박남춘·임수경·유대운·김민기·노웅래·정청래·진선미·김현·전병헌·서영교 의원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성태·황영철·이노근·박성호·함진규·김태원·강석호·권성동·이완영·홍지만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발의)

(2014. 10. 31 김관영·김광진·김승남·박광온·박기춘·박주선·변재일·부좌현·이개호·이상직·정성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

(발의)

(2014. 10. 31 김현·김용익·박남춘·강기정·이춘석·유인태·이상직·김성주·김관영·장병완 의원 발의)

이상 4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황인자·손인춘·박윤옥·정희수·이완영·윤상현·홍문표·윤명희·김명연·이자스민 의원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심윤조·주영순·박인숙·문대성·박명재·김상훈·강은희·김광림·이이재·류지영·원혜영·이강후·김태원·유승민·정성호 발의)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안

(2014. 10. 31 정부 제출)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우남·신정훈·최규성·김춘진·조정식·김영록·부좌현·이윤석·조경태·김성곤·이석현·김승남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우남·신정훈·최규성·김춘진·조정식·김영록·부좌현·이윤석·조경태·김성곤·이석현·김승남 의원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우남·신정훈·최규성·김춘진·조정식·김영록·부좌현·이윤석·조경태·김성곤·김승남·이석현 의원 발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우남·신정훈·최규성·김춘진·조정식·김영록·부좌현·이윤석·조경태·김성곤·이석현·김승남 의원 발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우남·신정훈·최규성·김춘진·조정식·김영록·부좌현·이윤석·조경태·김성곤·이석현·김승남 의원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우남·신정훈·최규성·김춘진·조정식·김영록·부좌현·이윤석·조경태·김성곤·이석현·김승남 의원 발의)

이상 7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강석훈·박명재·김세연·이만우·송영근·정문헌·김희선·김현숙·홍지만·유승우·김광림·박대동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안규백·김승남·김현미·김성곤·이춘석·손인춘·송호창·김관영·유승민·

박주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 발의)

(2014. 10. 31 신기남·주승용·이윤석·경대수·이찬열·배재정·전병헌·박주선·최규성·김관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정청래·인재근·부좌현·장하나·정성호·박남춘·김광진·박민수·민홍철·김민기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정청래·인재근·부좌현·장하나·정성호·박남춘·김광진·박민수·민홍철·김민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동철·김우남·정성호·이개호·김성곤·이원욱·강창일·박남춘·장병완·박주선·백재현·강기정 의원 발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 발의)

(2014. 10. 31 장윤석·경대수·이우현·이종진·김희선·정수성·이한성·강석호·유재중·이철우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장윤석·경대수·이우현·이종진·김희선·정수성·이한성·강석호·유재중·이철우 의원 발의)

이상 3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안규백·김승남·김현미·김성곤·이춘석·손인춘·송호창·김관영·유승민·박주선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손인춘·송영근·이진복·황인자·정희수·안규백·이강후·장윤석·강은희·심윤조 의원 발의)

이상 2건 국방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정병국·김명연·홍지만·조원진·유승우·전하진·김태호·송영근·염동열·

이강후·심윤조·황영철·권성동 의원 발의)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함진규·이현승·김태흠·하태경·이노근·이완영·김희국·이우현·박성호·강석호 의원 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0. 31 김관영·김승남·박광운·박주선·변재일·부좌현·이개호·이상직·이윤석·오제세·정성호 의원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우남·신정훈·최규성·김춘진·조정식·김영록·부좌현·이윤석·조경태·김성곤·이석현·김종태·김승남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0. 31 김우남·신정훈·최규성·김춘진·조정식·김영록·부좌현·이윤석·조경태·황주홍·김성곤·이석현·김종태·김승남 의원 발의)

이상 2건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